
第123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2000年11月8日(水) 午前10時

議事日程

1. 서울市政및教育行政에 관한質問

附議된案件

1. 서울市政및教育行政에 관한質問 ... 1面

(10時 22分 開議)

○議長 李容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 서울市政및教育行政에 관한質問

○議長 李容富;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이번 제123회 임시회에서는 오늘 하루 네 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후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20분의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金成奎議員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奎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高建 市長님과 劉仁鍾 教育監님, 묵묵히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실 것이라 믿고 싶은 집행부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이며 송파 제5선거구 출신으로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金成奎議員입니다.

우리 나라 김대중 대통령께서 역사적인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여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다 같이 새로운 각오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충고하고 다짐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건립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 7월 군포시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 백지화로 김포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에서 군포쓰레기 반입거부로 인해 쓰레기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낀 나머지 95년 8월 29일 서울시는 1구 1자원회수시설 건립정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자치구 책임하에 부지를 선정하고 2001년까지 착공 가능한 자치구에 대하여는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등 일체의 비용을 시비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사업 참여구의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 중 송파구를 비롯하여 15개 구가 건설계획서를 제출하고 곧바로 건설계획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송파구 같은 경우는 1일 1,350톤 처리에 건립비가 2,000억이 소요된다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서울시로부터

100% 지원약속을 받고 자원회수시설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를 선정하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수차례 공청회, 설명회 등과 마지막에는 많은 예산을 낭비하며 다수의 주민들을 외국 자원회수시설 견학을 여러 차례 시키면서 가까스로 설득을 시켰고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등을 진행해 오다 어느 날 서울시 정책이 광역화로 바뀌면서 강남, 송파 하려고 하다 강남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강남은 강남대로 1일 900톤 처리 시설 용량으로 건립이 완공되었으며, 독자건립 계획을 요청한 강동구는 예산 문제를 들어 무산시키면서 송파, 강동 광역시설로 계획변경하면서 1일 500톤 규모의 시설에 사업비 1,192억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시장께서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송파구는 99년 1차 6,200여 평을 42억 1,500만원에 매입하고 2000년 2차 1만 770여 평을 87억 6,300만원에 보상을 완료하고 건설할 계획인데 또다시 어느 날 갑자기 건설계획이 보류돼 버렸습니다.

중랑, 강서 역시 함께 보류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오락가락한 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뿐입니까? 현재 가동중인 시설 역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해 놓고 가동률이 평균 50%도 안 됩니다. 노원이 800톤 규모의 243톤 처리하여 가동률 30%, 양천이 400톤 규모에 234톤 처리하여 가동률 59%, 강남이 900톤 규모에 370톤 처리예상하여 가동률 41%, 현재 건립 추진중인 마포구는 총 사업비 1,999억원에 1일 900톤 규모인데 가동률은 앞으로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이번에 계획이 보류된 송파, 중랑, 강서 3곳의 보류사유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서울시는 상기 시설에 대하여 96년부터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건설추진이 지연되다 시설규모 결정과정에서 종량제 실시와 재활용 등으로 쓰레기 소각량이 점차 감소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서울시 적정소각용량 산정용역 결과를 토대로 소각시설 기본계획 수립 후 시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건설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시의회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1구 1소각장 건립이라고 하여 강행을 할 때는 해당 지역 시의회는 수많은 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 유치한다 하여 지탄과 시달림을 받게 하고 이제와 보류해 놓고 진행중인 용역결과를 토대로 또다시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후 건설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데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1구 1소각장 건립계획을 세울 때 25개 구가전부 건립하게 되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었으며 그 당시 어떤 기준하에 시설규모 처리용량을 정했으며, 이제 와서 2억원이라는 예산을 써가며 적정소각용량 산정용역을 한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가동중인 양천, 노원, 강남의 50% 미가동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송파 자원회수시설 부지는 엄청난 국민의 세금을 떼어먹고 지금도 감옥에 가 있는 한보 땅으로 아무 쓸모도 없이 방치된 땅을 무려 130억원을 쏟아부어 매입했습니다.

계획이 만약 취소가 된다면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시 자력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적인 경제발전이 절박했던 6·70년대 도심지 철거민을 이주시켰던 철거민촌을 생활환경을 개선시킨다 하여 73년도에 자력재개발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1세대당 토지면적이 약 6·7평으로 너무 적어 자력재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27년간 방치되어 주민들의 생활은 말 그대로 원시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거여2지구만 보아도 지금도 연탄보일러에 공동수도, 새벽이면 10m 이상 줄을 서있는 공동화장실은 어이가 없어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바람이 불면 지붕이 날아가고 환경위생상태는 엉망이며 단칸방에서 4·5명의 식구가 생활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분들에게 어느 나라 어떤 법이 적용한단 말입니까.

주민의 구차한 삶을 구제하기 위하여 주민의 동의를 모아 현실성 있는 합동재개발을 10여년을 넘게 추진하여 가까스로 재개발변경계획안을 1999년 12월 6일 서울시에 접수하고 주민대표들이 수차례 서울시를 방문하여 요구를 했음에도 서울시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원칙론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이런 곳이 송파구 거여2구역을 비롯하여 무려 12개 구역이 있습니다.

76년 8월 28일 자력재개발로 사업계획을 결정할 당시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결정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결정할 당시 과연 6·7평의 토지에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라고 판단하여 자력재개발로 결정했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합동재개발로의 사업변경이 왜 또한 안 되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법규 미비 등을 고수하다 보면 몇 년 몇 십년이 또 넘어가는데 그 동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도록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집이 무너질 것이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데 그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개발유보지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97년 5월 1일 개발유보지역으로 고시한 송파구 장지동 300-3호 일대 10만평은 당초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76년 3월 27일 건설부고시 제37호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고 90년 3월 21일 건설부고시 제138호로 다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92년 9월 24일 건설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하였으며 95년 12월 22일 송파구고시 제39호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제한고시를 한 바 있고 97년 1월 7일 개발을 유보하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었으며 다시 99년 7월 1일 송파구고시 제24호로 서울特別市土地形質變更等行爲許可基準에 관한條例 제3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한 지역의 토지를 주거지역, 녹지지역, 택지개발예정지역, 지구해제, 개발유보지역 등으로 무계획적이고 오락가락한 정책이 나온단 말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가 되니까 주민들은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 준비하며 그때 이미 고물상, 폐차장, 적치장 등 많은 시설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다 갑자기 지구가 해제되니까 전부가 다 전과자가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 자원회수시설, 한전변전소, 운전연습장, 최근에 확정된 버스 2,0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서울시 공영버

스주차장 건립 등 이미 녹지지역으로서 그 기능을 상실했고 농사 역시 불가능할 정도이며 환경오염은 이미 그 도를 넘어섰으며 자연녹지로서 보전할 가치와 명분이 전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성급한 개발보다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개발유보지로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거나 개발을 최소화하여야 할 대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줍니까? 이미 녹지는 훼손되고 혐오시설은 자꾸 들어오고 환경은 오염돼 버렸는데 무엇을 보전한단 말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가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84년에 시작하여 91년에 완료된 송파구 가락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발생한 사업 이익잉여금은 본사업이 종료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사업이익금은 전액 본사업 지구의 주민복지사업으로 환원투자하여 준다고 그 당시 토지구 및 해당 구민에게 수없이 약속해 놓고 10여 년이 다 되도록 정산처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사업 종료 시점에서 총 사업투자비는 얼마였고 총 수익금은 얼마인지도 답변해 주시고 2000년 10월 말 현재 이익잉여금 중 본사업지역에 환원투자한 현금과 현물을 답해 주십시오.

앞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향후 투자계획과 관계법령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당시 해당 지역주민들은 터무니없이 감보를 많이 했고 과도한 증평대금을 징수하였다 하여 지금까지 이의

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견해와 피해를 보았다는 토지주들에게 그 어떤 이해와 설득을 시켰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高建 市長님과 劉仁鍾 教育監님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날로 급증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 비행청소년 문제에 있어 본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어떤 문제보다도 우선으로 두고 2년 넘게 대안을 제시하고 따지고 질문하였지만 역시 형식적인 시늉만 낼 뿐 어떤 완전한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일 뿐입니다.

99년 教育廳 통계에 의하면 비행문제아 청소년이 약 1만 3,700명이나 됩니다. 이 아이들은 중·고등학교를 제적당했거나 장기 무단가출한 상태에 있으며 중국집, 가스배달원, 주유소 아르바이트, 심지어는 술집에서 일하거나 돈이 궁하니까 원조교제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엄청난 우리 청소년들이 중·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이 앞으로 사회에 나와 무엇을 하겠습니까? 강도, 폭행, 약물남용, 절도, 음란불법매체를 접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퇴생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자퇴를 후회하고 재입학하기를 원하는 청소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자기가 다녔던 학교에만 재입학이 허용되고 타 학교에는 재입학이 불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가 자퇴생들을 다시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학교분위기를 해칠까 봐서죠.

그렇다면 이제 정부에서,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서 나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청소년은 서울시에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학교를 만들어 문제학생들을 재교육시켜 줘야 합니다.

복학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재교육을 시켜 복학을 시켜주고 그렇지 않는 아이들은 자기 적성을 살려 기술교육을 시켜 취업전선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高建 市長님, 비행청소년 문제를 教育廳에만 맡기지 말고 서울시에서 맡아서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정확한 시스템 아래 100% 관리를 하여 이 아이들이 잠시 빼뺏어졌지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희망찬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劉仁鍾 教育監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창 성장기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고른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전면급식을 실시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민간업자에게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는 학교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균형 있고 고른 영양을 공급하기 위하여 각 학교별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죠? 위생과 청결을 위하여 정기위생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급식은 질이 떨어지고 비위생적이며 이물질이 자주 들어 있고 하여 급식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2,000여 명의 학생수에 100명에서 200명만이 급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작한 사업이 이렇게 효과가 없고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과연 앞으로 어떤 대책으로 어떻

게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教育監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질육류나 생선을 납품하다 구속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식중독 등 위생적이지 못한 음식을 조리하여 먹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教育監님, 내 아들 딸과 손자 손녀가 먹는다면 과연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부식 식자재를 구입하여 학교에서 직접 조리를 하여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식구입 부분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종류별 3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하여 매주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이야 어떻든 납품업체들은 낙찰받기 위해서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낙찰이 되면 당연히 가장 싼 물건을 구입하여 납품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우고기를 요구했는데 젓소 고기나 저질 고기를 납품하고, 생선을 요구하면 수입생선이며, 냉동식품은 메이커도 없는 최하품이며, 야채, 과일은 시들어서 썩기 직전에 있거나 동물사료용이나 가능한 것을 납품하고 있는 사례가 흔히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하시겠습니까?

최저가입찰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한 최저가입니까? 자꾸 가격을 싸게 구입하며 급식비가 남으면 되돌려줍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검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학교에서 어떤 검수방법이 있습니까? 고작해야 저울 하나 갖다놓고 용량이나 재고 있으며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5일 모 초등학교를 새벽에 그 학교 운영위원장과 방문하여 검수를 해 보았는데 물건은 7시 40분경에 배달됐으며 영양사는 8시 20분경에 출근하였습니다.

그날 아침 방울토마토가 115kg이나 되어 뜯어보니 시퍼렇고 맛이 아주 시고 비위가 상할 정도였습니다.

농수산물관리공사에 보면 매일 경매가 시세를 알려주는 부서가 있습니다. 즉시 거기에 전화하여 그날 시세를 확인해 보니 10kg짜리 한 박스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상품은 2만 3,000원이었고 사람이 먹기 힘든 하품은 불과 1만원에서 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에게 반품요구를 했더니 다시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역시 비슷했습니다. 상품으로 갖다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업자측에서 너무 손해를 보니까 할 수 없다고 하여 본의원이 직접 전화하여 상품으로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물건을 받고도 반품시킨 사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은 그런 저질 식품으로 조리한 음식을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敎育監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학부모가 주축이 되어 검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사, 영양사, 학부모 2·3명 이렇게 구성하여 매일 검수한다면 아마 학부모들도 적극 찬성할 것이며 그런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7월 16일 한 초등학교에 썩지 않는 학교급식 우유란 MBC방송국의 보도를 보고 본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산간벽지도 아니고 바다 한가운데도 아닌 서울시내 초등학

교에서 매일 먹는 급식우유가 6개월 이상 썩지 않는 우유를 먹인단 말입니까? 즉시 학부모들은 교장선생님께 자연우유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그냥 먹고 있습니다.

급기야 학운위와 학부모들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를 의뢰하게 되었는데 검사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산도가 기준치 0.18% 이하보다 높은 0.22%로 나타났으나 이는 상온보관시 지방산화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썩지 않는 우유는 부패에 필수적인 미생물이 없는 무균상태가 유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검사결과를 통보받고 학교장은 인체에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먹인다고 급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敎育監님, 초등학생에게 우유를 왜 먹이십니까? 지방이 산화되어 버리고 미생물이 다 파괴되어 버린 우유를 인체에 해가 없다 하여 계속 먹인다면 차라리 생수를 먹는 것이 낫지 불안하게 이런 제품을 먹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敎育監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시내 초등학교 중 이런 제품을 먹고 있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되며,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MBC 보도를 보셨는지요? 보셨다면 어느 학교인지 아실 텐데 그 사건 이후 지금 학부모와 학교장의 관계가 아주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장을 전보발령 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李容富; 金成奎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게 알려드립니다.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시의원들께서 시정질문을 준비해서 임시회때 모처럼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좌석에 아직까지도 출석하지 않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지금 현재 좌석에 출석하지 않은 공무원은 경위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都市管理委員會 所屬 朴謙洙議員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謙洙 議員; 존경하는 李容富 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高建 市長과 劉仁鍾 教育監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새천년민주당 소속 강북 제2선거구 출신 도시관리위원회 朴謙洙議員입니다.

21세기 천년을 맞이하여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는 데 있어 시정운영상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질문하오니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적 단순보호 차원의 정책을 바꾸어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작년 9월 國民基礎生活保障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본격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종합복지정책인 만큼 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보완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 해결대책

을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로 동 제도의 수급대상자 선정 조사와 관련하여 영세 자영업자, 일용직, 무직자에 대한 소득조사에 어려움이 너무 큽니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세 신고 등의 자료가 없고 국세청의 소득신고 자료도 시의성이 없어 이 자료에 의하여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며, 더욱이 일용직 근로자도 조사담당직원과의 상담을 통하여 나타난 사항을 소득으로 조사하고 있어 실제소득과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개선방안으로 급여신청과 동시에 신청자에 대한 현행 복지행정시스템에 소득과 재산자료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행정불신을 제거하기 위한 통합전산망을 조기에 구축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딸이 있는 가구에 대한 부양비 부과 및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과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生活保護法 및 유교적 관습에 의하여 결혼한 딸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강조하지 않는 현실에서 딸이 있는 가구의 부양비 부과로 탈락되는 가구의 대부분이 탈락사유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딸이 계속적으로 부양하기는 곤란하므로 딸에 대한 부양비는 부과기준을 한시적으로라도 하향조정하고, 노년층 및 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부양비 부과제도에 대한 당위성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부양의무자의 자녀, 부모 등에 대한 소득에 따른 부양비 부과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므로 부양의무자 가구의 생활실태와 실제 부양능력을 반영하지 못한 채 부과되고 있으며, 실제 최저

생계비 120% 초과소득에 대하여 부양비 부과는 현 생활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부양의무자의 소득 중 최저생계비의 120%를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부양비로 부과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곤란하지만 30% 정도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정수급자 및 부양기피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자 및 부양기피자의 경우 단지 보장비용만을 징수하는 것은 허위 부정에 의한 급여를 예방하는데 실효성이 없으며, 비용 징수보다도 좀더 강력한 벌칙제도를 도입하거나 향후 일정기간 수혜를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부양의무자 조사방법을 개선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조사는 응답거부 및 조사기피 등으로 충분한 조사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에 임하는 직원들도 업무과중으로 업무에 소홀하여 일반수급자 조사와 같이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조사내용이 거주확인 등에 그치고 있어 정확한 실태의 파악으로 제공할 복지서비스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방문조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 생계비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수급자와 탈락자에 대한 복지혜택의 격차 발생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엄청난 불만과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해 온 한시보호제도는 부양의무자의 기준 적용없이 재산기준 4,4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적용

해 오고 있으나 현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기준과 재산기준을 2,900만원부터 3,600만원까지로 하여 적용함으로써 서울시내 1만 340가구, 2만 5,077명이나 되는 많은 한시보호대상자의 탈락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좋은 취지로 시행되는 동 제도가 오히려 피해를 주는 잘못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자와 탈락자간의 생활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실제 복지혜택에 있어서는 의료급여 지원, 생계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으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활공공근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지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생계비지원액 결정의 어려움이 큼니다.

영세자영업자 및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실제소득의 조사가 어려워 상담을 통해 확인된 소득으로 생계비를 지급하게 되어 소득이 노출되는 봉급생활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지원액 결정과정에서 민원인과의 끊임없는 마찰의 발생이 예상되는데 근로능력 유무 및 가구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 생산적 복지개념의 핵심사업인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자활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인프라의 부족으로 자활지원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금년까지 실시한 취로사업을 폐지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을 구분하여 이들에게 자립·자활능력을 향상토록 유도하고자 하나 보장기관과 연계하여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할 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관, 민간단체, 시민단체의 자활사업 수행기

반이 매우 취약하여 결국 단순자활공공근로와 자원봉사의 형태로 자활지원사업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자활지원사업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취업대상자의 경우도 실제 취업률이 20% 안팎이므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자활공공근로사업의 참여를 원하게 되어 결국 현재의 취로사업의 형태로 변질되어 자활사업의 근본목적 상실하여 부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자활사업수행기관의 확충 및 공공분야에 대한 새로운 사업과 표준모델의 개발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자활공공근로사업 소득공제의 문제점과 개선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 소득을 생계비 지급시 차감토록 하고 있어 자활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때와 참여하지 않을 때 실질적인 소득의 차이가 거의 없어 자활사업 참여를 기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활사업 참여로 인한 소득 중 일정부분을 공제하여 사업참여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제도 추진상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첫째로 기초자치단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의 보장비용 분담률을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50대 25 대 25로 이 분담률을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에 노원, 강서, 강북 등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이 좋은 강남, 서초보다 수급대상자가 많이 발생하여 보장비용을 과다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간의 부익부 빈익

빈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는데,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분담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교부금 제도를 통하여 영세한 구청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市長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문인력의 확보 및 기구의 신설이 절실합니다.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활사업은 조건이행여부의 확인, 면담을 통한 조건의 변경, 소득액, 생계비 결정 등 업무가 취로사업보다 몇 배나 복잡하여 이를 수행할 전문적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구별 사례관리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기존의 생활보호팀을 자활지원팀으로 확대개편하고, 전문인력을 증원해야만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行自部, 保健福祉部와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급자의 가구의 소득변경에 따른 소득등급 변경의 번거로움을 해소해야 합니다.

수급자의 소득조사가 洞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區에서의 결정행위는 요식행위에 불과하여 불필요한 업무량의 대폭 증가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득등급 결정 권한을 동사무소로 위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합니까?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난 가구 구성원의 정보가 민원해결 과정이나 취급부주의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안전장치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우리 市 교통방송 운영과 관련하여 지적하고자 합

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교통방송은 서울·수도권 청취자를 대상으로 교통, 기상정보 및 생활정보를 전달해 주는 방송매체로서 금년 갤럽여론조사에서 직업운전자의 44.3%, 자가운전자 및 비자가운전자의 33.8%가 청취하는 인기 있는 라디오 방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제 동방송을 공사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봅니다.

라디오방송 중 시민과 가장 친숙한 시민의 방송이 되었으므로 이제 운영체계를 공사화하여 방송서비스 질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교통방송처럼 관영방송체제에서는 경직되고 비효율적이므로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창의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결국은 경쟁력을 잃게 되는 한계점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조직의 문제점을 보면, 방송요원이 계약직공무원 신분으로 보수, 승진 등이 타 방송사에 비해 매우 열악합니다.

따라서 타 방송사로 이적이 높으며, 특히 하위직 이직률이 매우 높아 전문방송인 양성에 장애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방송요원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市의 전입금 외 협찬수입만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IMF체제 이후처럼 협찬수입이 줄어들 경우 시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 가장 친숙한 방송이면서도 서울시의 방송이라는 이유로 방송협회에 가입하지 못하여 PD, 기자, 아나운서 등 취재요원에 대한 타 언론기관의 견제가 매우 심한 상태입

니다.

이런 상황에서 交通放送本部가 공사가 되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영조직으로서 나타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여 타 방송사와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디지털시대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해서도 공사로의 체제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사가 되면 첫째로 상업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서도 방송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개정된 放送法에 따라 공사가 됨으로써 방송협회에 가입할 수 있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에 교통방송 본래의 설립취지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地方公企業法에 근거한 공사가 설립되기 때문에 시정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이중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현상은 공사화 이후 노조의 설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력구조상 조합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117명의 1/3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31명입니다.

따라서 쟁의시 현재 교통방송 인력구조가 역삼각형임을 고려할 때 간부들이 방송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고 판단되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市長께 묻겠습니다.

市長께서는 10년 전 交通放送本部를 설립했습니다. 이제는 交通放送本部를 방송공사로 다시 한 단계 도약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5년 전 경찰에서 교통방송 운영권을 서울시에서 경찰로 요구했습니다. 이때 서울시의회에서 반대건의문을 제출하고, 交通放送本部가 ARS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교통방송이 서울시에 그대로 소속되어 본래 기능을 다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 지속적으로 공사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사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이제 放送法이 개정되었습니다. 공사화의 여건이 조성되었음에도 이를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 어떻게 공사화를 추진할 것인지, 市長께서 직접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미디어시티서울2000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은 성과가 미흡하고 특히 예산낭비라는 부정적 측면이 강하게 대두되어 향후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신중히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999년에 새천년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인 서울에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市長의 고민의 결과, 서울의 대표적인 국제적 축제로 개발하고 고부가가치 문화관광상품 육성을 목적으로 미디어시티서울2000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民選市長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목표대로 성취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주제가 대중성이 없어 이해하기 어려웠고, 추진팀이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현실을 도외시한 행사에 시비 50억원 등 총 예산 90억원을 투입하여 소기의 성과

를 거두지 못한 채 값비싼 수업료만 낸 꼴이 되었습니다.

영상예술과 산업기술을 접목시켜 정보화의 선두도시 서울이라는 이미지를 심으려고 했지만 참가하는 대중의 수준과 정서를 감안하지 못한 어려운 예술작품을 예산 27억원을 투입하여 선정하였으나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였고, 더욱이 엔터테인먼트와 디지털앨리스에 20억원을 투자하였으나 첨단 과학기술작품에 시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원초적으로 무리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가인원이 10월말 현재 14만 4,000명으로 목표 예상인원 50만명보다 적으며, 인원이 적으니 사업수익 또한 예상액 20억원의 1/4수준인 5억원밖에 안 되는 것도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9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련 공무원들만 고생하고 기대 이하의 성적을 얻은 것이 최대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市長께 묻겠습니다.

이번 행사와 관련하여 광주비엔날레행사를 참고하셨는지, 참고하셨다면 어떤 부문을 어느 정도 반영하여 행사를 추진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0년 제3회 광주비엔날레행사는 시비 15억원, 국비 65억원을 포함한 총 207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이자와 협찬금 수익사업으로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가 민·관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면서 행사경비 114억원에 참가인원은 61만 명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미디어시티서울2000 행사 종료 후 사업평가서 작성시 4차까지나 참여한 기획자문회의 위원 외에 민간 각 분야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 디지털시대에 시민의 정서와 서울의 목

표를 미디어시티서울2000과 같은 행사로서 접목시킬 수 있겠는가를 냉철히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2년 뒤의 행사계획을 전면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市長께서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하철의 지속적인 확충이 교통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하철6호선이 완공되면 총 연장 287km입니다. 세계 내 전철을 포함하면 335km로써 동경 632km, 파리 695km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대중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지하철 및 경전철이 지속적으로 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市가 이미 건설한 지하철의 경우 km당 연 20만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교통난 해소뿐만 아니라 건설경기의 활성화로 고용 창출 효과도 크게 거양한 바 있습니다.

현재 9호선이 건설부로부터 허가되어 내년에 착공되고, 10호선이 안산, 일직, 영등포, 청량리를 경유하는 광역전철A선에 26km가 대체되고, 11호선이 광역전철B선에 17.5km가 대체 건설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999년 3월에 발표된 서울시의 중기교통종합계획에 삼양동, 신림동, 월계동 등에 경전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도시철도를 광역급행노선, 지하철, 경전철 등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착공 및 완공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市政開發研究院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市長께 묻겠습니다.

광역전철, 9호선 등이 완공되면 간선철도망은 부분적으로 완성된다고 볼 수 있으나 서울시 전체지역에 지하철의 균형

있는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전철로서 주거지역 및 교
통혼잡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의 건설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市長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속히 노선을 결정하는 등의 계획을 확정시키고, 경
전철은 국내에 도입된 바 없으므로 기술도입 등 착공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화건설 부도에 따른 6호선의 개통에 대해서 묻겠
습니다.

11월말에 개통예정인 6호선의 상월곡에서 응암구간 중 용
산구 이태원동에서 중구 약수동에 이르는 3.6km구간을 담당
하고 있는 신화건설이 지난 7월 31일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
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화건설 부도에 따라 6호선의 개통이 어느 정도 지연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보증업체의 대리시공 또는 계약해지 후
신규발주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며 4개 항의 질문이 市長의 정
책적 결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항목마다 市長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
務員 여러분, 감사합니다.

○議長 李容富; 朴謙洙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行政自治委員會 소속 白懿宗議員의 질문이 있겠습
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懿宗 議員; 오늘날 프랑스의 자랑이요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름다운 파리市를 만든 사람은 1850년대 시장을 지낸 바롬 오스만 씨였습니다.

그는 상상력과 비전, 그리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추진력에 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훌륭한 그 시장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마포 갑 제2선거구 출신 白懿宗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李容富 議長,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高建市長을 비롯한 劉仁鍾 教育監,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백만 서울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정과 교육행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경륜과 덕망이 높으신 高建 市長님과 劉仁鍾 教育監님의 명쾌한 답변을 간절히 당부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의할 안건은 첫째, 교육감의 재산관리문제, 둘째, 국토관리 측면과 환경친화화 관련하여 매장을 지양하고 화장문화를 장려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절감하는 방안, 셋째, 질의한 내용에 대한 안건이 본청의 행정지시가 지방자치구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教育監의 무소불위의 재산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포구 아현1동에 소재한 소의초등학교 부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소의초등학교는 1945년에 설립된 55년의 반세기를 넘긴 학교입니다. 본교의 부지는 총 5,967평 중 교실 및 기타 건물 점유면적이 1,176평, 운동장으로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959평, 운동장 주위 나대지로 남은 것이 290평, 운동장 밖에 방치된 부지는 441평, 이와 같이 많은 부지를 소유하고 있음

에도 운동장은 불과 959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곳 재학생이 918명이고 보면 법정 운동장 면적은 1,100평의 운동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959평뿐입니다.

본교의 주위발전상을 보면 공덕1동 재개발아파트 800여 세대와 아현1동 재개발아파트 3개소에 추진하고 있는 약 3,000여 세대의 주민이 입주할 경우 학생은 앞으로 약 2,500명 내지 3,000명이 더 늘어나게 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현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금년 6월 27일 운동장 959평만 시설, 준공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해 인근 주민이나 본교 운영위원장인 이순녀 회장을 비롯한 학부모님들은 이 많은 부지를 방치해 놓고 좁은 운동장을 설치해야 하는지 의혹과 원성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과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접하고 본의원이 본교의 현장을 조사한바, 인근 삼성 재개발아파트의 회유에 의하여 441평의 부지를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대지로 방치된 울타리 바깥쪽 일부 441평을 현 시가로 환산해 보면 평당 600만원으로 볼 때 26억 4,600만원입니다.

이 많은 부지가, 아니 이 많은 재산이 교육감의 개인 소유라면 이렇게 방치할 수 있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현장조사 나갔을 때 만난 아현1동 392-117호에 거주하는 소의초등학교 제1회 졸업생이라고 하는 민초 김일영 씨는 이 값비싼 많은 땅을 이토록 방치할 수가 있는 것인지 통탄을 금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의원도 좁은 운동장을 넓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 개선토록 전임 몇 분의 교장선생님들께 요구한 적이 한두 번이 아

니었습니다.

그 모두가 무산되고 결국 이제 와서 인근 재개발아파트에 엄청난 혜택을 안겨주었습니다. 석축 6m 쌓아주고 철망으로 된 울타리를 설치했다고 만족을 느끼고 있는 학교측과 교육위원회 실무국장과 과장의 답변은 졸속으로 직무유기가 충분하다고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망 울타리와 옹벽 2억원에 쌓았다고 해서 441평의 재산, 약 26억 4,600만원과 바꾼 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련의 모든 것이 학부형들과의 협의 한마디 없이 학교와 교육위원회가 재발업자와 일방적으로 협의하여 졸속처리하였다고 해서 운영위원장 이순녀 회장 등이 시정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묵살하는가 하면 인신공격까지 한 관계자에 대한 분노가 아직도 남아 있으며, 운영위원회 이순녀 회장은 교육감을 면담코자 수차 요구했으나 면담치 못해 결국 본의원에게 진정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학교측에서는 아동교육에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학습교재 9건에 5,800만원 상당 물품을 재개발업자측에 촌스러운 요구를 하는 내용도 운영위원회와 협의도 없었고, 문서발송 자체도 전혀 협의 없이 명의를 운영위원장 이순녀라고 명시하여 발송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더욱이 교장선생님은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과 협의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는 학부모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로 인해 여론이 확산되자 교장선생님과 서무주임이 전보되는 등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본 건을 다루면서 사실 갈등 또한 있었습니다. 표를 얻어야 존재하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재개발측 주민도, 학

교 학부모님들도 모두가 저에겐 귀중한 유권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표도 중요하지만 백년대계의 꿈나무를 길러내는 학교의 문제, 즉 저 개인보다는 공인으로서 공적인 문제가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문제는 재산 수십 억의 돈보다는 학교시설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것입니다.

教育監, 현장을 보셨습니까? 본 건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보시지 않았으면 본의원의 질의가 끝난 후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오후에 정확한 답변 주시기 바라며, 재산관리와 비좁은 운동장 확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현장조사와 그 동안의 과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재개발 측에서 석축을 쌓은 것은 학교를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니고 아파트를 고층으로 건축하기 위해 쌓은 것이고, 울타리를 설치해 준 것은 울타리 밖의 나대지 441평을 공지로 두어야 아파트측에서 조망권이나 일조권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 설치한 것을 마치 학교를 위하여 설치한 것처럼 교육청 관계자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종의 거래관계에서인지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사안들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개인의 소유재산이었다면 이럴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教育監,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 곳 재개발아파트가 고층으로 건축되기 전에 현장을 파악하여 교육감 소유재산에 대한 확고한 조치를 강구하십시오.

인근 아파트가 고층으로 완공이 된 후에는 그 많은 입주

주민들의 반대로 교육감의 소유부지는 손을 댈 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긴급예산을 투입하여서라도 축대를 운동장 높이까지 쌓아 운동장도 확장하고 재산도 확실하게 보존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관계자의 변에 의하면, 축대를 높이 쌓으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말은 현대의 공법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10m, 아니 20m의 석축옹벽을 쌓은 재개발아파트지역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육감의 소유 부지는 소의초등학교 주변 방치된 441평뿐만 아니라 1,000여 평 모두가 해당되는 것이오니 차제에 면밀히 파악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본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고 향후계획서를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매장을 지양하고 화장의 장려와 화장의 예산절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8년 전인 1992년 제65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장묘문화 개선에 대해 질의와 개선책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후 상당 부분 개선은 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 현실과 시대변화에 따라 화장 방법도 병행하여야 하나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8년 전 질의 당시 내용을 보면, 서울시에서 1일 평균 사망 인구 102명, 연간 3만 7,230명이며 화장 건수는 1일 30건, 연간 1만 950건에 비하여 매장은 1일 72건에 연간 2만 6,280건이었습니다.

당시 조사내용을 보면, 벽제 용미리와 망우리 공동묘지의 매장 여분은 1만 5,000기밖에 남지 않아 앞으로의 대책이 무

어나고 물었더니 당시 이원중 시장과 관계공무원은 공여지책으로 무연고 묘지 약 3만기를 개발하여 대체하겠다고 답변하기에, 그렇다면 1년 남짓 지나면 만장이 될 텐데 그 후 대책은 또 무엇이나고 물었더니 답변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용미리와 벽제 공동묘지는 만장이 되어 98년 8월에 예상한 대로 중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한 내용을 보면, 화장의 비용과 납골안치 비용 약 3만원을 전액 국고나 시비에서 향후 10년간 지원하고, 당시 묘지분양가 조성된 2평당 113만 4,000원과 조성되지 않은 공동묘지 6평당 48만원을 300% 내지 500% 인상하고, 가정의례준칙법을 개혁 차원에서 市長은 개정토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화장에 대한 장점을 개발하여 TV나 언론매체를 통해 정책 및 시책사업으로 홍보하고, 서민들의 모범이 되고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사회 저명인사나 지도층 인사의 화장사례를 적극 홍보하라고 제시한 바가 8년 전에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葬墓事業所 鄭寅俊 所長의 보고에 의하면, 최종현 회장님의 화장 후 화장 건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듯이 남들보고 화장하라고 하지말고 서울시 고위공직자 또는 敎育監님께서 화장하겠다고 발표하신다면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하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高建 市長께서는 이미 98년 9월 16일 화장하시겠다고 유언하셨습니다만 아직도 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본의원은 화장하기로 8년 전 질의할 때 가족과 협의 결정한 바 있었음을 밝혀 둡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매장이 금지되어 100% 화장하

고 있고 특히 중국의 최고지도자인 덩소평과 국가주석인 양상쿤 등 지도층이 화장과 검소한 장례절차로 모범을 보인 예가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97%, 중국은 100%, 네덜란드는 98% 등 화장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벽제 장묘사업소 실태를 보면, 화장로 16기에서 1일 최고 114구까지 화장한 바 있으며 1일 평균 90구 화장하는 것으로써 화장 소요시간은 1구당 평균 95분이며 가스로는 평균 1만 9,00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목관으로, 즉 나무관으로 화장할 경우를 말합니다. 지난 8월에 목관을 사용하지 않고 신개발품인 천연섬유인 지관을 사용, 실험한 결과 화장시간 1구당 65분이며, 가스로는 1만 4,000원으로 실험결과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관을 사용하지 않고 지관을 을 사용했을 경우 1구당 화장 소요시간은 30분이 단축되고 가스로는 5,000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하루 평균 90구 처리할 경우 시간은 45시간 단축이 되고 가스로는 45만원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험결과로 볼 때 종이관을 사용할 경우 수백 명의 화장으로 인한 장시간 기다림도 해소되면서 현재의 시설 16기 화장로보다 많은 42구 더 화장할 수 있으며 가스로도 21만원 절감효과를 확인했습니다.

1개월로 볼 때 132구 화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30일로 보면 1,980만원, 약 2,000여 만원의 예산이 한 달에 절감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험은 "이웃과 사람"이라고 하는 지관회사 제품으로 바로 우리 시의 벽제 장묘장에서 실험확인한 것이기에 의

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실험한 지관회사인 "이웃과 사람"이란 회사 외에 4개 업체가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으나 영안실 운영업자의 고질적인 횡포 때문에 판매가 되지 않아 좋은 상품을 개발해 놓고도 회사는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음을 조사해 봤습니다. 우리 세금이 매월 2,000여 만원씩 낭비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葬墓事業所 鄭寅俊 所長의 말에 의하면 목관업자의, 말하자면 나무로 만든 관 말입니다. 목관업자의 저항 때문에 지관을 권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우리 서울시 관계공무원의 전직 근무자가 목관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공사를 분명히 하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서는 이러한 실정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르고 계십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내 국·공립 병원과 시립병원 또는 행려병자 사망시 반출되는 화장 건물은 의무적으로 지관을 사용하도록 하고

둘째, 서울시내 63개 영안실 소유 각 병원 원장에게 정책 및 시책사업으로 적극 협조를 구하여야 할 것이고

셋째, 목관을 사용할 경우 상당한 화장료를 징수토록 하고 넷째, 필요한 경우 제도나 조례를 개정하여 지관을 사용토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더욱 깊이 연구하여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질의와 주장을 즉시 실천하여 매월 낭비되는 시민의 혈세 2,000여 만원을 절약하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관과 지관을 비교해 보면, 제작시 유해 도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화장 후 환경공해 발생 또는 불씨도 전혀 없는 반면 목관은 제작시 유해 도료인 락카라든가 카슈, 우레탄 호마이카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장 후 환경공해 발생, 나무의 불씨, 잔재가 많이 발생하므로 경제적인 면이나 단축되는 시간절약과 환경친화적인 측면은 물론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히 목관은 전량 외국에서 수입한 나무이기 때문에 국가경제에도 이바지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이것은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다득인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알고 방관한다거나 본의원이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즉시 시행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천이 늦으면 늦은 만큼 우리 시민의 혈세는 증폭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본의원은 오늘부터 지켜 보겠습니다. 2,000여 만원은 일용근로자 30명의 한 달 분 인건비가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큰 돈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9월 4일 121회 임시회 때 본의원이 질문한 마포구 신수동 재건축 지구의 시유지 무상양도 건입니다.

질의 답변 당시 관계국장께서는 잘못 적용한 都市計畵法을 인정하시고 마포구청에 지시하여 재건축 조합이 사업에 지장 없도록 조치하시겠다고 답변하였으나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구청의 답변은 시에서 확실한 지시가 없다 하여 아직도 시유지 관계로 재건축 조합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찌 시나 자치구의 행정이 이토록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까?

더욱이 본의원을 분노케 하는 것은 자치구인 마포구 관계

공무원은 사유지 매입토록 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면서
서도 서울시의 확실한 지시가 없어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무소불위 행정 때문에 시민, 아니 서민들만 한
마디로 골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공직자의 전
형적인 직무유기이고 복지부동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
다. 거듭 촉구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국장님, 즉시 명쾌한 답변을 자치구에
서면으로 지시하여 서민들의 재건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
도록 조치해 주시길 거듭 간절히 당부합니다.

高建 市長님과 劉仁鍾 教育監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
분, 중국의 속담에 나이 든 말은 길을 잃지 않는다고 말하였
습니다.

우리가 가장 훌륭한 의견을 최선책이라고 하고 자신의 모
든 힘을 성실히 기울일 때 최선을 다했다고 표현합니다. 이처
럼 최선이라 함은 모든 면에서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시민을 돕는 일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시민에 대한 배
려가 상존할 때 여러분은 성숙된 공직자로서 우리의 수도 서
울을 이끌어갈 자질을 갖춘 지도자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공직자 여러분은 자세를 지금이라도 새로이 가다
듬고 의원의 질의내용 하나 하나에 성실한 답변 해 주실 것
을 간절히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간절히라는 단어를 여러 번 강조한 것은 간절히란
간이 저리도록 아픔을 뜻하는 것입니다.

3선 의원을 하면서 본의원은 물론 동료의원님들은 수십 차
레 질의해도 집행부에서는 그 때마다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
관해 왔기에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 점 헤아려 답변 주실 것

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사당에 계신 모든 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李容富; 白懿宗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文化教育委員會 소속 趙養鎬議員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養鎬 議員; 존경하는 李容富 議長과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高建 市長과 劉仁鍾 教育監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趙養鎬議員입니다.

高建 市長께서 서울市長에 취임한 지 약 2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졌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간의 高建 市長의 시정운영에 대하여 일부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서울시를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천만그루 나무심기, 부정과 비리를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해 온 인터넷 감사, 2002년 월드컵을 훌륭히 치르기 위한 세심한 월드컵 준비태세,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광화문을 비롯한 도심의 횡단보도 설치 및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셔틀버스의 운행시작, 여성들의 복지와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여성센터 및 문화센터의 건립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같은 당의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정적인 평가가 있어 이를 문제제기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

한 일환으로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남·북간의 불균등한 발전에 대한 문제의식 부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현재 강남·북간에는 엄청난 불균등 한 발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남에는 교육, 도로 교통망, 주거환경, 복지의료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서울에서, 아니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동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강북에는 교육, 도로, 교통망, 주거환경, 의료복지시설에 있어서 강남에 비해 엄청나게 열악한 상태에 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강남·북간의 불균형 발전상태를 몇 가지를 통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2000년도의 강남, 서초, 중랑, 도봉, 강북구의 예산내역을 보면 표1과 같습니다.

(표1) 강남, 중랑, 도봉, 강북구 예산내역

2000회계년도(당초)			
구별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강남구	225,411	193,711	31,700
중랑구	125,472	109,256	16,216
도봉구	91,100	85,133	5,967
강북구	107,491	94,028	13,463

1999회계년도(최종)			
구별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강남구	220,771	192,583	28,188
중랑구	134,582	116,850	17,732
도봉구	107,570	100,404	7,166
강북구	124,431	111,258	13,173

표1에서 보듯이 강남구의 예산은 도봉구 예산의 2.5배, 강북구의 두 배, 중랑구의 1.8배 정도로 규모가 큼니다.

또한 강남·북간의 의료시설의 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개 자치구별로 종합병원 수, 병상수를 조사해 보면 표2와 같은데 강남·북간의 격차가 너무 커서 이게 과연 올바른 통계자료인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표2) 5개 자치구별 병원과 병상수

구별	계		종합병원		시립병원		비고
	병원수	병상수	병원수	병상수	병원수	병상수	
강남구	4	2,925	3	2,425	1	500	지방공사 강남병원
서초구	4	1,534	3	1,284	1	250	아동병원
중랑구	1	134	1	134			
강북구	1	294	1	294			
도봉구	1	477	1	477			

강남구에는 종합병원수가 3개에 병상수가 2,425개, 또한

시립병원인 강남병원이 하나에 500병상수가 있고, 서초구에는 종합병원이 3개에 병상수가 1,534개, 시립병원이 하나에 병상수가 250개, 송파구에도 종합병원수가 3개에 병상수가 2,938개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강북지역을 조사해 보면, 중랑구에는 병원수 하나에 134병상, 강북구에는 병원수 하나에 294병상, 도봉구에는 병원수 하나에 477병상에 불과합니다.

주거환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의료시설에 있어서도 이렇게 강남·북간에는 엄청난 격차가 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랑구나 도봉구, 강북구 등 강북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종합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떠나면 강남지역을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의료시설에 있어서 강남·북간의 큰 격차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우리 高建 市長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인 어린이공원에 있어서도 강남·북간에는 엄청난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한 2000시정업무자료 147호 170페이지와 171페이지를 보면 동대문구는 어린이공원수가 21개에 3만 4,459㎡, 중랑구는 42개에 4만 7,141㎡, 성북구는 16개에 3만852㎡인데 비해서 서초구는 90개에 15만 3,589㎡, 강남구는 63개에 9만 5,954㎡, 송파구는 71개에 10만 1,522㎡로서 어린이공원에 있어서도 강남·북간에 엄청난 격차가 벌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표3) 자치구별 어린이 공원

(단위:개소,㎡)

어린이 공원	
--------	--

구별	개소	면적
동대문구	21	34,459
중랑구	42	47,141
성북구	16	30,852
강북구	33	43,278
서초구	90	153,589
강남구	63	95,954
송파구	71	101,522

표3과 같은 통계수치를 보고 강북지역의 어린이들이 차별 받고 있지 않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본의원이 지적한 예산규모, 의료시설, 어린이공원, 이 세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강남·북간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강북에 살고 있는 시민이나 강남에 살고 있는 시민이나 같은 서울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과 주거환경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있고 이 차이가 축소되기는커녕 더욱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高建 市長께서는 본의원이 지적한 이러한 강남·북간의 불균등한 발전에 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만약 인식하고 있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대책을 세워 왔는지, 아니면 강남·북간의 불균등한 발전에 관해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 했는지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서울시를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부정과 비리가 없는 도시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남·북간에 불균등한 발전에 관한 해소책이 그 어느 정책보다도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북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돈만 벌면 살기 좋은 강남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자녀들을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고 일류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 강남지역으로 이사를 가고자 합니다. 심지어는 결혼적령기에 든 자녀들이 좋은 결혼상대자를 만나기 위해서라도 강남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북지역주민들이 느끼는 현실입니다.

이 현상을 高建 市長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냥 웃고 넘겨도 되는 일이겠습니까?

강북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겠습니까? 高建 市長은 강남·북간의 불균등 발전에 대하여 심각하게 인식했어야 하고 강남·북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시의 정책이 강남·북간의 격차를 해소하기는커녕 더욱더 확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그 예를 들어 보면 7호선 전철역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의원은 한달 전에 7호선 전철역 면목역에서 승차하여 강남구청역에 하차한 적이 있습니다.

강남구청역에 하차하여 바닥을 보니 대리석이 번쩍번쩍거리고 있고 천정에도 마감재가 화려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살고 있는 중랑구 지역의 면목역, 상봉역, 사가정역의 바닥은 일반 타일이 깔려있고 심지어 면목역 천정에는 마감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배관과 전기선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값싼 재료로 마감처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지하철역사에 있어서 강남과 강북을 차별하는구나 생각을 하니 저절로 한숨이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도시철도공사의 7호선 각 전철역 공사비 내역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본바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는 표4와 같습니다.

(표4) 지하철7호선 면목역·사가정역·강남구청역 면적 및 공사비 현황

역명	건축공사비 면적(m ²) (백만원)		바닥		벽체	
			대합실	승강장	대합실	승강장
면목역	8,621	3,953	테라췌 타일	테라췌 타일	자기질 타일	자기질 타일
사가정역	7,960	3,845	자기질 타일	자기질 타일	자기질 타일	자기질 타일
강남구청 역	10,352	6,191	정선 대리석	정선 대리석	정선 대리석	정선 대리석

표4에서 보듯이 면목역, 사가정역, 강남구청역에 사용된 재료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강북지역에는 값싼 자기질 타일을 쓰고 강남구청역에는 비싼 정선대리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북지역의 7호선 전철역사와 강남지역의 지하철역사의 공사비가 표4와 같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高建市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강남·북간의 불균등한 발전, 강남·북주민간의 갈등과 강북주민의 허탈감, 강남·북간의 불균등한 발전이 서울시민의 단결을

해치고 이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영·호남지역 감정처럼 강남·북간의 지역감정이 서울시에서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왜 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서울시공무원들이 왜 이 문제에 대하여 인식이 부재한 이유가 무엇인지 본의원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서울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3급 이상의 공무원들의 주거지를 조사해 보기로 하고 서울시 집행부의 3급 이상 공무원들의 주거지에 관한 조사를 요청하여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왜 이 문제에 대한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의 인식이 부재한 이유의 한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본청에 재직하고 있는 3급 이상 공무원이 약 오십 분인데 놀랍게도 강남구에 열세 분, 서초구에 여덟 분 도합 스물 한 분이 강남구와 서초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주거의 자유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이 두 지역에 사신다고 해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본의원은 천만을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입니다만 지역구가 중랑구에 있다 보니 중랑구에서 멀리 떨어진 강서구나 양천구, 은평구의 속사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양천구에는 김포공항이 인접해 있어서 비행기 때문에 소음이 심하다고는 알고 있지만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체험적으로 실제로는 양천구민들이 겪는 소음의 고통을 잘 알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남구, 서초구에 집중해서 살고 있는 3급 이상 공무원들이 어떻게 실제로 강북지역의 교통문제, 환경문제, 주거문제, 의료복지문제를 알겠습니까? 본의원이 생각

할 때는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남·북간의 불균등한 발전이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더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본의원이 느낀다면 논리의 비약일까요?

98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강남·북간의 불균등한 발전 해소책의 일환으로 세목교환(종토세↔담배소비세)소위원회를 구성하여 99년말까지 논의를 계속하였으나 일부 당의 반대로 세목교환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세목교환으로 강남·북간의 불균등한 발전이 근본적으로 해소된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표5와 표6, 표7을 보면 강남·북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세목교환은 꼭 필요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표5)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현황(2000예산 기준)

자치구 평균	100%초과	50%미만
59.9%	강남 177.3% 서초 108.3% 중구 149.8%	강북 31.1% 도봉 34.1% 등 17개구

(표6) 2000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예산현황

(단위:억원)

구분	총액	최고-강남구	최저-도봉구	차이
종합토지세	4,233	745	63	682(11.8배)
담배소비세	4,485	305	110	195(2.8배)

(표7) 종합토지세 세원분포(2000예산)

19개구	6개구
44%	56%

그러나 세목교환에 관해서 국회에서 한창 논의가 되고 있을 때 서울시의 노력이 본의원은 부족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의 해당 과장이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세목교환의 찬성을 부탁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실무과장이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부탁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근본적으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세목교환에 관한 논의가 한창일 때 高建 市長 및 세 분의 부시장께서는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셨습니까?

각 당의 대표들과 해당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세목교환의 관철을 위하여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전혀 본의원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해당과장만 국회에 보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高建 市長 이하 고위공무원들이 강남·북간의 불균등한 발전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본의원은 高建 市長께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시장 산하에 가칭 강남·북 불균등 발전 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위원회에서 강남·북간의 불균등한 발전상태에 관하여 조사를 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제안합니다.

이 위원회는 이 문제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는 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 일부 공무원들로 구성하여 강남·북간의 불균등 발전 해소대책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본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高建 市長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高建 市長께서 강남북간의 불균등 발전 해소대책이

서울시의 어떠한 현안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강남북간의 불균등한 발전해소를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표6에서 2000년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예산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종합토지세가 전체 총액이 4,233억원인데 최고치가 강남구가 745억원입니다. 최저치는 도봉구가 63억원, 차이가 액수로는 682억원, 규모로는 11.8배가 종합토지세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를 보면 4,485억원이 총액인데 최고치가 강남구가 305억원, 최저치가 도봉구 110억원입니다. 차이는 195억원 2.8배, 만약에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를 맞교환했다라면 도봉구예산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증액이 되어서 도봉구 또는 강북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과 연구기능의 통합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서울시에는 교육기관으로는 서울시립대학교, 공무원교육원, 연구기능으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이들 세 기관은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인데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일정 정도 문제가 있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시정개발연구원과 공무원교육원, 시립대학교는 특성상·기능상 서로 업무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세 기관이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과 시립대학교간에는 1998년부터 상호교류 협력을 맺어 학술교류를 하고 있다라고 하나 형식적인 교류

에 그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교류현황을 보면 시립대에서 시정연에 파견근무 1명, 연구과제 참여 6명, 공동연구 1과제 위탁과제 수행 8과제에 그치고 있고 시정연에서 시립대학교에 상하반기 강의출강 11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개발연구원에 나온 여러 성과물들은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연구에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개발연구원과 공무원교육원의 교류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연구성과물들이 시정의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을 할 때 의미 있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성과물들이 일정 정도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업무협조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물들이 연구로만 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조직체계를 한번 살펴보면 2과 10팀 현 인원이 100여 명에 달하고 있고 시정개발연구원은 현인원 224명 중 연구직이 52명, 과제별 위촉 연구원이 146명, 일반직이 2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기능은 서울시공무원의 교육훈련, 공무원 채용시험, 민간인 자격시험 관리 등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위상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본의원은 교육과 연구기능은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의 기능을 확대하여 공무원교육원에서 연구기능까지 수행하는 역할을 하여 교육과 연구가 유기적인 통합체계가 이루어지든가, 아니면 시립대학교에서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합하여 연구기능을 시립대학교로 일원화하여 연구에 대한 중복투자를 막고 집중투자를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교육과 연구기능의 통합에 대하여 高建 市長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디어시티서울2000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시티서울2000은 9월 1일부터 실시하여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예산이 약 9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큰 사업이나 이 행사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매우 비판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판의 요지는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해서 관람객을 유치하지 못했고 또한 낭비적인 예산집행에 있다 하겠습니다.

우선 관람객수를 보면, 10월 18일 현재 8만 3,138명에 관람수입은 1억 8,400만원에 불과합니다.

10월말 현재 광고 협찬과 입장료 상품판매 및 자판기 수입까지 합쳐도 총수입은 1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행사가 수익이 최고의 목적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적자를 보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70억원이나 적자를 본 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 홍보부족, 제목이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의 사용,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계획과 행사진행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시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미디어시티서울2000을 관람하기 위해 평일 18시 50분에 행사장을 방문했는데 행사를 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다. 행사장의 전시물은 오후 7시면 철수한다는 행사 안내원의 말을 듣고 황당한 생각이 들면서 돌아왔습니다.

미디어시티서울2000은 낮에 여가시간이 있는 전업주부나 학생, 노인분들만 관람하고 시간이 빠듯한 시민들은 오지 말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일반직장인들의 퇴근시간을 19시라고 볼 때 행사장에서 멀리 떨어진 직장인들은 물론이고 행사장 근처의 직장인들도 전혀 관람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행사가 민간업체에서 주최하고 주관했다면 과연 오후 7시에 전시물을 철수하고 행사장을 오후 7시 30분이면 폐쇄할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만약 민간업체에서 이 행사를 주최한다면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여 수익을 얻고자 최소한 21시까지 행사를 진행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앞에서 언급한 이유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도 못했고 또한 시예산에 상당한 낭비를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미디어시티서울2000 행사를 통해 서울시는 교훈을 얻어야 하고 각성을 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서울시행사는 일회성행사, 행사를 위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장소와 시간배정, 알기 쉬운 주제의 선정 그리고 저렴한 관람료를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한 서울시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과감히 민간업체에 행사를 위탁 주최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高建 市長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劉仁鍾 教育監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남북관계는 과거 대립과 같

등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학급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하나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은 과거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통일교육과 거의 차별성이 없습니다.

과거 권위주의정권 시절에는 반공교육이 통일교육이었는데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아직도 과거의 반공교육의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통일교육을 위해서 한국자유총연맹에 학생들을 위탁교육시키려 하는데 교육여건상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나 잘못하면 과거 통일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통일교육을 획일화시키지 말고 다양화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각종 시민단체에서는 통일교육강좌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이 논의하여 시민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강좌를 학생들이 듣거나, 아니면 변화된 남북관계에 맞는 전문성이 있는 교수나 시민단체의 강사가 각급 학교를 방문하여 통일교육을 하게 되면 보다 효과적인 통일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거처럼 폐쇄적이고 획일화된 통일교육은 오히려 학생들과 교사들로부터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교육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을 교사와 학생들에게 맡겨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는 수많은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는 단 10여개 학교에 불구

하고 도서관을 방과후 및 방학중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는 단 한 학교도 없음이 교육청에서 보내 준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업에 방해가 안 되는 방과후, 토요일, 일요일, 방학중에는 운동장뿐만 아니라 도서관, 컴퓨터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학교가 학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학교에 등교하고 지역주민들이 학교에 가서 도서관에서, 또는 컴퓨터실의 책과 잡지를 읽고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역사회공동체의 기관으로 학교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학교가 폐쇄적인 기관으로 전락하여 저녁에는 지역에서 가장 썰렁하고 무서운 공기관으로 남지 말고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공기관으로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생각에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高建 市長, 그리고 劉仁鍾 教育監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의회 본회의 방청을 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容富; 趙養鎬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네 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해서 본회의 휴회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나면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1時 54分 會議中止)

(13時 45分 繼續開議)

○議長 李容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오전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高建 市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高建; 존경하는 李容富 議長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2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金成奎 議員님, 朴謙洙 議員님, 白懿宗 議員님, 趙養鎬 議員님께서 시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폭넓

은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시정운영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시정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분야별 시책사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成奎議員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서는 자원회수시설의 건립정책이 일관성이 없게 진행되어 왔다고 지적하시면서 당초 계획과 같이 25개 전 차구가 시설을 건립할 경우에 투자재원의 확보계획, 그리고 시설규모의 기준, 그리고 적정 소각용량 산정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실시하는 이유, 현재 가동중인 시설의 미가동 부분에 대한 활용계획과 송파자원회수시설 건설계획을 취소할 경우에 매입한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金成奎議員님께서 쓰레기소각정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회수시설의 건설은 93년에 난지도매립지가 사용이 종료되고, 수도권에서는 유일한 김포매립지의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해서 95년부터 1구 1소각장 건설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건립예산은 시비와 국고보조금으로 조달하고 소요예산을 감안해서 연차적인 건설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때의 시설규모는 입지선정이 완료된 시설별로 전문기관

에 의뢰해서 5년 후의 쓰레기발생 예측량 등을 감안해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종량제의 실시와 재활용률의 증가,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로 소각대상 쓰레기량이 대폭 감소되어서 자원회수시설의 건설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생겼고, 또 부지확보가 어려운 데다가 건설비의 절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98년부터 광역화정책으로 전환한바 있습니다.

기존 소각시설의 낮은 가동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측량을 토대로 계속해서 소각장을 건설할 경우에 시설의 과다용량이 우려되기 때문에 쓰레기발생 추이를 정확히 조사해서 적정 소각용량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말에 완료되는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기존시설을 포함한 권역별 광역화 계획을 수립 확정할 계획입니다.

물론 기존시설의 시설용량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류중에 있는 송파자원회수시설 건설계획은 용역결과에 따른 광역화계획 수립 때에 건설의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매입해 있는 부지의 타용도 활용방안은 아직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원님께서서는 지난 제17회 정기회에 이어서 1만 3,700여명이 되는 중·고등학교 재적생과 무단가출 청소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시켜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 문제는 교육청에만 맡기지 말고 서울시에서 대안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17회 정기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구로, 신림 가출청소년 쉼터와 청소년정보문화센터, 직업 체험센터를 통해서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직업학교 3개소, 성지학교 등 사회교육시설 8개소, 그리고 서울시 청소년시설 등을 통해서 직업교육,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육청 산하 12개 상담센터에서 전문가들이 학교 적응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시에서는 증가하는 중도탈락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교육관리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세대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직업체험센터 내의 시설을 활용한 대안학교 전문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새해부터는 서울시가 공동책임을 가지고 교육청과 진지하게 협의 협력하면서 보다 발전되고 다양한 대안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謙洙議員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수급대상자 선정조사, 생계비 지급, 자활지원사업, 제도추진상의 문제 등에 대해서 폭넓게 지적을 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새로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심을 갖고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적인 답변은 제가 드리고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는 기존의 생활보호 대상자를 포함하여 총 10만 1,703가구, 23만 1,31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8만 556가구, 17만 8,605명을 수급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무엇보다도 수급대상자의 빠짐없는 급여신청과 정확한 소득재산조사가 이 제도시행의 성공과 직결된다는 판단 아래 가용인력, 조사인력 4,400명을 총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장방문과 개별 면담을 통해서 실태를 파악하였고 제2금융권까지 포함한 금융전산조회 13만여건, 그리고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일단 부적합판정자에게도 다시 한번 소명기회를 부여해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탈락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일용직,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동종 유사업종과의 비교분석, 인근주민과의 면담 등을 통해서 객관적인 소득파악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분기별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서 소득재산의 변동상황을 파악하여 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현재 운영 초기에 있는 복지행정시스템이 정상 운영이 되는 2001년부터는 전국 단위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종전 생활보호대상자 중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한시생활보호대상자 등 1만 2,393가구에 대해서는 취로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특히 올 겨울에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 지원사업을 통해서 수급제외자 그리고 제도상 한계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틈새계층에 대해서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자활지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시에서는 가구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하여 市政開發研究院을 통하여 다양한 자활지원사업모델을 개발한 바 있고, 이를 토대로 11월 15일까지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확정해서 11월 중순 이후부터 자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자활사업에 후원하는 지원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소득산정 때에 그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등 근로유인장치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자활공동체, 장애인 직업 재활사업 참여 소득과 학생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또 취로사업소득에 대하여 공제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이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비용은 국가 50%, 서울시25%, 자치구 25%의 비율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북, 노원, 강서 등 수급자가 많거나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복지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치구간의 재원부담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 우선적으로 서울시의 보장부담비율 50% 이상을 타 시·도 수준 즉 20%선으로 조정을 해서 근본적인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계법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중에 있고, 아울러서 그 전이라도 저소득가구가 많은 자치구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방안 또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朴謙洙議員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서는 방송법이 개정되어서 교통방송본부의 공사화의 여건이 조성되었는데 이를 추진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공사화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교통방송은 제가 市長때 90년 6월에 특수방송으로 허가가 되어서 개국된 이래 서울, 수도권 시민에게 교통정보, 기상정보, 시장정보 등 생활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그 후 우리 시에서는 교통방송의 상업방송 허용과 공사로의 전환을 4차례에 걸쳐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당시 방송허가 주무처인 공보처에서 특수방송임을 이유로 해서 상업방송과 공사화 전환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교통방송의 공사화 등 운영체계의 개편은 상업광고의 가능성, 합리적인 운영방안 등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사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자체 수입의 비율을 보면, 현행 地方公企業法上 공사설립은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교통방송본부는 2000년 예산 118억 중에 자체 수입이 34.7%인 41억에 불과하여 공사로 전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상업방송의 허용에 있어서도 금년 1월 개정된 放送法은 방송허가권을 문화관광부에서 방송위원회로 변경한 것일 뿐 방송허가권을 가진 방송위원회에서도 교통방송은 특수방송으로서 상업방송을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우선 방송위원회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상업방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한편 외부전문가의 영입, 방송전문인의 양성, 책임경영제의 실시, 협찬광고 확대, 마케팅전략의 강화 등을 통해서 교통방송의 수지를 개선하고, 또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朴謙洙議員님께서서는 미디어시티서울2000사업에 대해 앞으로 전문가 참여하에 결과를 분석한 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행사계획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 아울러서 趙養鎬議員님께서서는 장소의 선정, 관람시간, 주제선정, 관람료의 책정과 민간에의 행사위탁 필요성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디어시티서울2000축제는 그 동안 서울을 상징하는 문화축제가 없는 상태에서 97년부터 문화계에서 미디어아트를 중심으로 한 문화축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디지털산업이 어느 도시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울시로서는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닌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미래형 신산업과 연계하여 도시의 성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타 시·도에서 개최하고 있는 미술, 영화들과는 다른 디지털미디어에 중점을 둔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

니다.

이에 따라 축제준비도 99년 2월부터 디지털미디어분야의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의 자문을 거쳐 정리된 계획을 토대로 해서 99년 7월에 미술, 정보통신전문가들이 참여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준비단계를 거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처음 치르는 종합전시행사이기 때문에 99년 4월과 2000년 6월에 광주비엔날레조직위원회와 행사장에 직원을 파견해 관련자료를 수집, 이를 또 참고토록 하였고, 특히 행사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미디어시티조직위원회는 이 행사가 순수한 예술행사가 아니라 디지털예술과 과학을 포함한 종합적인 성격의 행사이다 보니 이를 책임있게 맡을 수 있는 민간업체가 없었고, 별도의 조직 구성에 따른 비용의 최소화, 행사조직은 행사운영기관과 준비기관에 따라 조직구성인원이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특성 등을 고려해서 다른 도시들처럼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지 않고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산업진흥재단에 위탁형식으로 추진을 하되 민간전문인력 24명과 서울시에서 파견된 공무원 16명 등 총 40명의 민관협력추진체 성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행사조직위원회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빠르게 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새로운 디지털미디어축제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콘텐츠산업 등의 문화적 요소를 가미시킴으로써 새로운 마케팅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지금 개관 준비중에 있는 시립미술관, 박물관 그리고 DMC에 계획중에 있는 첨단과학관과 그 전시내용물을 행사 후에 연계해서 사용한다

는 계획을 세우고, 1년 3개월에 걸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관람객과 행사운영과 관련해서 행사관람객은 11월 7일 현재 17만 2,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행사이다 보니 일반시민들에게 전시내용이 생소하고, 또한 이를 쉽게 이해시키는 홍보방법상에 미숙한 점이 있었고, 또 행사 운영상에 제반 문제가 적지 않게 있었다고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염려하시는 행사 수지문제는 당초 시비 50억원을 기본으로 기업협찬과 매표수입 등 35억 이상을 예상하여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내용이 구체화됨에 따라서 최종실행예산은 80억원 수준 이하로 감축편성 집행을 했습니다.

최종정산은 사업종료 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수지균형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술적인 수지 균형 이외에 이번 전시로 인해서 앞으로의 미술관, 박물관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영상작품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영상기자재 300여종과 영구전시물로 확보한 18종의 전시물이 유형자산으로 서울시에 남게 되고, 디지털 앨리스와 엔터테인먼트의 프로그램은 서울시가 구상중에 있는 디지털미디어센터의 전시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유무형의 자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행사의 개최로 국내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디지털문화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해외에서도 뉴욕타임즈, 아트뉴스페이퍼 등의 언론 보도에서 미디어시티서울 행사를 서울을 대표하는 미디어예술과 산업의 만남의 장으로 소개하는 등 서울시 행사의 인지

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2001년 10월 네덜란드 암스텔담에서 열리는 월드와이드비디오페스티벌과 로텔담필름페스티벌에서도 전시하겠다고 하는 교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전시가 기대한 만큼의 흡족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처음 치르는 행사로서 새로운 분야의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얻어진 노하우를 앞으로 차근 차근 축적하면 오랜 전통의 외국축제를 따라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미디어시티서울2000행사는 서울시가 일회성으로 개최한 것이 아니라 서울의 디지털산업발전을 촉진시키고, 서울시민들에게 디지털문화의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차원에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행사 종료 후에 이번 행사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점 등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면밀히 분석하고, 이번 행사에 참여하였던 자문위원 뿐만 아니라 이 행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들을 폭넓게 참여시켜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 건설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交通室長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白懿宗議員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議員님께서서는 매장중심의 장묘문화를 화장중심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장묘문화 개선대책 이를 위한 서울시 공직자들의 화장발표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또한 종이관 사용을 통한 화장예산 절감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화장장려와 장묘문화개선을 위하여 장묘문화개선특위委員으로 활동중이시고, 또 장묘문화 개선에 몸소 참여하고 계신 議員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화장장묘와 장묘문화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미 98년 9월 16일에 화장유언에 서명을 한 바 있습니다.

99년말 현재 우리 시의 화장률은 41.9%로서 전국의 31%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화장 중심의 장묘문화개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장묘문화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한 민간주도의 시민운동의 활성화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98년 9월 30일 한국장묘문화개혁국민협회를 서울시가 시민단체와 함께 출범을 시켰고, 이 장개혁과 서울시가 협력해서 화장유언남기기운동을 현재 펼쳐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9월부터 한겨레신문사와 장개혁 그리고 서울시 중심으로 장묘문화개선시민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바가 있고, 장묘시설 견학, 사진전시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연, 무취의 최첨단시설로 화장, 납골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시립화장장시설을 7기 증설하는 사업을 금년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이와는 별도로 화장로 20기 이상 규모의 새로운 추모공원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추모공원은 내년중에 착수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장개혁 그리고 선경이 협조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종이관 사용을 통한 화장예산 절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관이 목관보다 소각시간이 20분 단축되고, 또 값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장묘사업소에서는 종이관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유족대기실과 식당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유관기관 등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각 언론기관에 홍보자료를 또 제공하는 등 대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내 대형 종합병원 등을 방문해서 종이관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적극 권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퇴직한 직원 중에 목관업자가 없느냐 하는 지적말씀이 계셨는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퇴직한 직원 중 목관업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다만 주차관리요원 8급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이 경기도 소재 모 목관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일은 있다고 합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무슨 목관 대신에 지관을 권장하는 권장정책에 무슨 영향이 미치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종이관의 의무적 사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 관해서는 우선은 먼저 의무적 사용하는 제도보다는 실효성있는 권장방안을 먼저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趙養鎬議員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趙養鎬議員님께서서는 강남·강북 자치구간의 예산규모, 의료 시설, 지하철 역사 시설, 또 고위공무원 강남지역 편중 등을 예로 들면서 세목교환, 강남·북 불균형해소위원회 구성 등 강남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강남과 강북은 그 형성 시기와 개발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도로, 공원, 주거환경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1980년대 말까지는 서울시가 강북도심 사대문 안의 개발을 억제하는 정책을 또 견지해 왔습니다.

제가 시장이 된 1990년에 비로소 이 불균형 정책을 시정한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전통적인 구도심지인 강북지역은 자연발생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반면에 이른바 강남지역은 80년대 초부터 도시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개발되어서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재산과세 중심의 현행 구세체계하에서는 강남·북 지구간의 예산규모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강남·북간의 불균형 문제는 단시일 내에 일시에 해소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에 강남·북 균형발전을 주요계획과제로 설정을 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시설의 균형배치를 도모하고 있고, 강북지역에 대한 예산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등 꾸준히 불균형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강북 대 강남의 시비 투자비율을 보면 96년에 강북 54, 강남 46, 54 대 46에서 2000년에는 강북 74, 강남 26으로 74 대 26으로 강북지역에 대하여 투자비율을 대폭 확대해서 도로, 교통, 상하수도, 문화, 복지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투자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세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구세와 시세의 교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15대 국회 임기 내의 처리를 위해서 시장인 저도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는데 힘써 왔고 행자부나 국회 관련 상임 위원회에 세목 교환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시키면서 입법화를 적극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법안이 15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어서 입법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강북지역의 여러 부족한 도시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강남·북간의 불균형이 해소가 되도록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교환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세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시장 산하에 강남·북 불균형발전해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기 보다는 기존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을 강화해서 시정개발연구원과 합동으로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해서 조사 연구토록 한 후에 내년에 완료될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이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역사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남·북간의 지역적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7호선 정거장 내부 사용자재는 2기 지하철 6, 7, 8호선 정거장 설계 당시에 정거장에 사용되는 자재의 획일성을 탈피하고 정거장의 쾌적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2기 지하철 148개 정거장을 상징정거장, 특급정거장, 그리고 일반정거장으로 분류를 하고 노선을 대표하거나 지명도가 높은 정거장은 상징정거장으로, 승하차 인원이 많은 정거장은 환승정거장, 상업중심이거나 공공시설에 인접된 정거장은 특급정거장으로, 그

리고 기타는 일반정거장으로 분류를 해서 건축외장을 고급화하고 층고도 상향 조정하는 등 공간구조를 보다 쾌적하게 설계하였습니다.

7호선 상징정거장은 2개소로서 강북지역에는 노원역 1개소가 있고, 강남지역에는 강남구청역 1개소가 있습니다.

7호선 특급정거장은 12개소로 이 중 강북지역에 5개소, 서부지역에 4개소가 있으며, 강남지역은 3개소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이용인원이 적은 역은 모두 일반정거장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따라서 강남·북간의 지하철 역사에 차등을 두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료시설은 강북지역이 강남지역보다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북지역에는 87개 병원에 2만 3,000여 병상이 있고 강남지역에는 85개 병원에 1만 8,000여 병상이 있어서 병상수 기준으로는 강북, 강남의 비율이 55.5% 대 44.5%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립병원 수에 있어서도 강북과 강남이 모두 3개로 같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趙養鎬議員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서는 시립대학, 시정개발연구원,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이 세 기관간의 교류가 미흡함을 지적하시고 공무원교육원 기능을 확대해서 연구기능까지 수행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연구기능을 시립대학으로 일원화하는 그러한 방법 등이 효율적이 아닌가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립대학과 공무원교육원은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시립대학과 시정개발연구원은

연구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3개 기관은 실질적으로는 설립목적과 기능, 그리고 고객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립대학교는 대학의 특성상 시정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교육 육성하는 기관인 반면에 공무원교육원은 현직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를 단기간에 집중교육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대상과 교육기간, 그리고 구체적인 교육목적이 달라서 양자간의 통합은 사실상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개발연구원은 우리 시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책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인 반면에 시립대학은 도시과학에 대한 일반이론 등 학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연구의 전문성과 과제의 성격이 차이가 있어서 양기관을 통합하는 것도 역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3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사전 시 전체적으로 교육 연구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립대학과 시정개발연구원간에는 방재, 환경공학, 재정, 금융, 도시경제 공동 연구용역을 적극적으로 넓혀나가고 양 기관에서 축적된 정보와 연구성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과 공무원교육원간의 연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인력을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의 강사로 참여시키고 연구결과를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하겠고, 이미 4급 공무원의 고급관리자 과정에 대해서는 실시중에 있습니다만, 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중 일부를 일정 기

간 시정개발연구원에 파견하여 공동으로 일정분야 연구를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연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을 공무원교육원 부지 내로 신축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容富; 다음 劉仁鍾 教育監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監 劉仁鍾; 존경하는 李容富 議長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23회 임시회에서도 서울교육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훌륭한 의견을 주신 金成奎議員님, 白懿宗議員님, 趙養鎬議員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적인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成奎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비행청소년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유흥업소에 취업하는 등으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중도탈락 학생과 부적응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생활 부적응학생을 위하여 12개 청소년상담센터나 시민단체 및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부설 카운셀링센터에 적응교육을 위탁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3개 직업학교에 위탁해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대안학교의 설립문제는 서울이 지역적 여건과 학부모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몇 개교에 질 높은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예산을 보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안학교 선정 및 운영과 관련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규학교의 중도탈락학생에게 대안학교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 입학을 유도하는 방안과 위 교육시설에 위탁교육을 의뢰하여 졸업시에는 원적학교 졸업장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 교육부와 이미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시다만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해서 적합한 형태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趙養鎬議員님께서 통일교육의 다양성과 획일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시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에 통일대비교육을 역점사업의 하나로 지정하여 지난 3월부터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역점사업으로 지정한 동기는 첫째,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매우 희박해지고 있고, 둘째, 작년에 우리 학생 300여명을 금강산에 여행을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학생들이 그 경험을 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셋째, 지금 남북간이 생활용어가 3,000여 개 정도가 다르

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기본 생활용어가 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금이 가기 때문에 결국 다른 나라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동기에서 금년초부터 통일 대비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통일 대비 교육을 집중사업으로 정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통일 대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6.15선언이 채택이 되어서 우리 敎育廳에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에는 크게 도움이 되고 붐이 조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통일교육의 실시내용과 방법은 조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과거의 반공교육 일변도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통일 대비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첫째, 5분 통일교육을 매주 실시하는데 이를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별로 교재를 편찬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의 내용은 종전과 같이 반공 일변도의 폐쇄적인 내용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시사가 맞도록 화해와 협력 중심으로 편찬되었습니다.

둘째, 학부모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은 통일부 산하기관인 통일연수원에 위탁해서 통일 전문가의 강의를 직접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자유센터에 보내는 것보다도 우선 분위기를 바꾸어 주기 위해서 통일연수원에다가 위촉을 했습니다.

셋째, 교원연수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서울교육연수원에서 담당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넷째, 통일체험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각종 통일교육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11월 9일 통일동산에서 꿈나무 통일한마당을 개최해서 통일을 체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내년에는 평양과 서울이 자매결연을 맺어 청소년들이 체험을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이 프로그램을 통일원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통일교육 거점학교를 4개 정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되고 교육된 내용이 다른 학교에서 일반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과 같은 방법 이외에서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白懿宗議員님께서 소의초등학교 축대 높게 쌓아 경사지 441평을 운동장 부지로 활용할 것을 제의하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白議員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제가 직접 가 보지는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개축 전부터 경사지가 그대로 놔둔 채 조정해서 학교환경을 가꾸는 것으로 설계하여 개축하는 과정에 인접 재개발조합측에서 축대를 말끔히 쌓아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6 내지 8M 높이의 축대를 쌓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가용면적이 166평 늘어난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축대를 높게 쌓아 학교의 가용부지 면적을 최대한 넓히는 문제는 학교 및 주변의 환경과 안전문제, 예산문제, 재개발지의 일반주택의 문제 등을 고려해서 검토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빠른시일 내에 白議員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또 개선하기 위해서 본청 국장이나 과장을 직접

현장에 보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容富; 劉仁鍾 教育監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交通管理室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交通管理室長 車東得입니다.

朴謙洙議員님께서 지하철의 균형 있는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전철로서 주거지역 등 혼잡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의 건설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경전철은 국내에 도입된 바가 없는 것이므로 노선 결정 등 계획확정과 기술도입 등 착공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지역에 지하철의 균형 있는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우선 경전철의 노선건설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말에 2기 지하철이 모두 완공이 되면 우리 시 내부기간 지하철교통망은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3기 지하철은 4개 신설노선과 3호선 연장구간 등 총 120km로서 94년 6월에 잠정적으로 노선을 선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수송수요가 높고 투자효율이 높은 9호선은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로부터 9월 6일 기본계획을 승인받아서 설계중에 있으며 나머지 노선에 대하여는 그 동안 우리 시의 상주인구가 크게 감소하였고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고 수도권 광역전철 계획이 수립되

는 등 계획여건이 크게 변화되어서 97년 10월부터 우리 시 市政開發研究院에 의뢰하여 노선에 대한 재검토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중 남서울역에서 청량리를 연결하는 10호선 일부 구간과 이촌과 강남을 연결하는 11호선 일부 구간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계획의 장기구상 노선에 포함되어서 현재 國土開發研究院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해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검토는 2001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보조수단으로 지하철이 서비스 되고 있지 못한 지역에는 경전철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교통혼잡 지역을 중심으로 경전철 도입을 추진하기 위하여 3기 지하철의 일부 잔여구간을 변경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지적으로 교통이 특별히 혼잡한 지역에 노면교통 혼잡완화를 위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특별 관련 구역과 연계해서 소형의 경전철시스템 도입방침을 수립해서 우선 강남구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민자유치로 도입하고자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경전철은 국내에 도입된 적이 없기 때문에 노선결정 등 계획확정과 기술도입 등 착공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해서는, 말씀 올린 대로 경전철은 지금 우리 시의 시대적인 요구라고 보고 도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검토중인 계획의 진전상태를 고려해서 도입준비를 해 나갈 예정이고 도입시에는 도입계획을 공개해서 기술도입 등을 일반참여 기업들과 협의하여 추진함으로써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李容富 議長님께서 서면질의를 통해서 잠실네거리 교통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네거리의 교통처리대책 문제는 지난 98년에 국정감사에서 교통처리 방향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최적의 교차로 개선방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우선 잠실네거리 구조개선을 위한 기본설계를 지난 98년 11월에 착수하여 주변도로의 방향별 교통량과 지하철 2·8호선 그리고 지하상가 등 여러 가지 지하시설물들에 대해서 상세한 조사를 시행했었습니다.

이렇게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고가차도에 대해서도 민원과 또 주변도로와의 연계를 감안해서 미관을 수려하게 하면서 연장을 조정하는 방안을, 두 가지 안을 한 개의 안은 연장 855m짜리 고가차도, 제2안은 연장 480m의 연장방안을 검토했고 지하차도에 대해서도 지하철 2·8호선과 지하상가 등 각종 지하시설물을 통과하면서 지하차도 연장을 조정할 수 없는지, 또 건설방법은 어떤 공법이 가능한지 등을 다양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 안에 대해서도 세 가지 안, 연장과 통과방법에 대해서, 또 통과방향에 대해서 세 가지 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최적안을 선정하기 위해서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그리고 관련 정치인, 그리고 교통·환경·도로·도시계획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특별자문단을 구성해서 99년 9월부터 2000년 6월까지 4회에 걸쳐 자문을 받는 등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하차도안은 지하상가 및 지하철 잠실역 훼손으로 설치가 곤란한 것으로 최종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고가차도 연장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인 방안을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李容富 議長, 李亮漢 副議長과 司會交代)

○副議長 李亮漢; 다음은 保健福祉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保健福祉局長 鄭圭台입니다.

우리 保健福祉局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白懿宗議員님과 趙養鎬議員님 질의하신 사항에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朴謙洙議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선정조사와 관련하여 영세자영업자나 일용직, 무직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소득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바로 통합전산망을 마련해서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자료를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행정불신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行政自治部에서 주관을 해서 시·군·구단위로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지행정시스템 프로그램을 지난 7월에 구청 등에 전부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9월말까지 복지대상자 재산소득에 대해서는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종합전산망이 가동되고 있고 이것이 완벽하게 가동이 되면 내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딸들의 부양비 부과문제하고, 그 다음에 딸

들의 부양비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되고 부양비 부과기준율도 너무 높다 그래서 하향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물론 딸에게 부양의무를 지우는 것은 지금 우리 고정관념이 딸은 출가외인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고, 또 딸을 부양비 부과비중이 너무 높다. 지금 현실적으로 각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한테 물어봐도 그런 내용이 실제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 제도가 처음 지난 말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시행을 해 보고 종합적으로 문제점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분석이 끝나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이에 따른 홍보대책도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부정수급자 문제하고 아들, 딸이 부양 기피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장비용 징수제도를 개선해서 비용징수보다는 좀더 강한 벌칙조항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셨습시다만,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에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급여를 중지하고 그 다음에 반환명령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만 가지고는 부정수급자를 근절하기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급여를 수급신청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행정적 제재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양의무자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

서 현장조사를 의무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부양의무자가 이번 조사에 8만 2,000가구 17만 2,000명에 대해서 전산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그러니까 지금 신청한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양의무자가 있는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방문조사를 해서 소득재산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사실확인 조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에. 당장은 우리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각 동을 통해서 반드시 현지실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시계 외 지역에 거주하는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계비 지급하고 관련해서 자영업자나 일용근로자의 실제 소득조사가 어렵고 그래서 근로능력 유무 및 가구특성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차등지급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직·간접으로 노임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작업소개소, 취업알선센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했으며, 소득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직종별로 평균임금 및 근로일수를 적용해서 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산정방법으로는 동종 유사사업자, 이웃의 면담 및 조사대상자의 생활실태나 지출상태 또 재산 보유 상태 등을 감안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영세자영업자나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산정시에 근로능력 유무, 그 다음에 가구특성을 고려해서 생계급여 지급시에 등급을 2만원 단위로 해서 60등급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2만원 단위로 60등급으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그 등급에 따라서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활전담 부서가 필요한데 이것을 조속히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것 빨리 설치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덜 되고 있습니다. 企劃豫算室과 협의를 해서 조속히 설치가 되도록 하고 각 자치구에도 자활지원팀이 조속히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인력 문제는 금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404명을 배치를 각 동에 했습니다.

내년도에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2,400명을 보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뽑아서 배치해 주도록 지금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번에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변경에 따라서 소득등급 결정권한을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위임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소득등급 결정은 현행법상 보장기관이 자치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 책임 하에 조사를 해서 자치구청장한테 올려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해 봐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수급권자 선정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자료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제대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취급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세 번째는 지금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화하고 있는데 자치센터에다가 복지상담실을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별도로 만들어서 상담하는 민원인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李亮漢; 다음은 都市計劃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邊榮進; 都市計劃局長 邊榮進입니다.

金成奎議員님께서 장지동 일대 개발유보지역과 가락토지구 획정리사업지구와 관련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상한 질문 주신 점 우선 감사드립니다.

먼저 장지동 일대 개발유보지역과 관련해서 당초 일반주거지역이었으나 녹지지역, 택지개발지역 지구해제 그리고 개발유보지역으로 자주 변경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 지역은 자원회수시설, 변전소, 운전연습장, 버스주차장 등 이미 녹지지역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질문 주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우선 그 간의 경위와 사유를 답변드리면, 송파구 장지동 지역은 1976년 3월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재정비하는 작업과정중에 장지동도 토지 이용상황에 맞추어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80년대 후반에는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택지확보를 위해 1990년 3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만 공군기지법의 관련규정에 비추

어 당시의 택지개발계획이 적정치 않다는 관련기관의 회신에 따라서 1992년 9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송파구 문정동, 장지동 일대는 강서구 마곡지구 등과 함께 서울에 남아 있는 얼마 남지 않은 대규모 가용토지자원으로서 1997년 4월 확정된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도시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까지 개발을 유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는 이 지역에 이미 들어서 있는 자원회수시설이나 변전소, 공영버스주차장은 도시관리상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설치 또는 설치중에 있으며 장래 이 지역이 개발되더라도 계속 필요한 시설이어서 먼저 조성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1999년 3월 지난해 우리 시에서는 서울市政開發研究院과 공동으로 이 지역에 대한 개발방향과 적정개발시점에 대하여 예비적인 구상작업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정, 장지지구의 개발은 인근 농산물도매시장의 이전문제, 성남비행장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과의 관계, 동남부 수도권 공공부지의 변화 또 서울시의 재정여건, 환경보호론적 관점, 기간시설 설치계획의 불확실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련계획이 확정될 때 그에 맞추어서 합당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市政開發研究院의 건의가 있었으며, 우리 시로서도 그 점을 수긍하고 있다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 늦추지 않고 개발방향에 대한 연구와 전문가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답변

드리면서 議員님의 계속적인 지도말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가락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항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사업 같은 것에 투자함이 없이 10년이 다 지나도록 정산 처리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관련규정은 조성된 재원을 도로, 공원, 광장, 하천, 하수도, 녹지, 수도, 제방, 유수지 등 공공기반시설에 국한하여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복지사업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그에 대한 투자가 이제까지 불가능했었다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성상 사업경비를 현물이 아닌 체비지의 매각을 통하여 충당하도록 하면서 환지 예정지 지정 당시 투자와 수입이 균형이 되도록 감보율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청산금을 징수 교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완료 후에 따로 정산하는 절차는 가락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료 시점의 총 사업 투자비와 수익금의 규모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가락구획정리사업지구의 사업기간은 82년 3월부터 88년 12월까지 사업시행에 투자된 비용은 총 1,130억 규모입니다.

사업이 완료된 1989년 2월말 현재 수익금 총액은 1,566억 원으로써 산술적으로는 436억원과 현물이 남은 것으로 집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금이 나타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은 따지고 보면 공사비로 선 투자한 시비는 불변가격이고 체비지 매각 등 수입은 공사 시점보다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동안 공공시설의 투자 및 일반적인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체비지 가격이 올라갈 때 그 가격차이, 즉, 투자시점과 회수시점 차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환지지정 시점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사업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정하는 체비지의 가격을 남거나 모자라지 않도록 균형되게 환지계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사업 완료시점에서의 수지는 균형을 이루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2000년 10월말 현재 본 지역에 투자한 현금과 현물의 규모를 질문 주셨습니다.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그 이후 가락지역에 투자한 것은 현금으로는 89년도에서 91년 간 1,100억 규모입니다. 현물투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투자계획과 관계법령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2000년 7월 1일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대신 도시개발법이 새로 제정되어 발효되었습니다.

새로 제정된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집행잔액은 2005년 8월 1일 전까지 조례가 정하는 날에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가락지구를 포함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집행잔액을 귀속시키기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를 위한 도시개발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용도는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시

개발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사업의 타당성이나 우선순위 등에 따라 議員님께서 전에 제기하신 대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주민복지시설에도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락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과도한 감보 및 증평대금 징수에 대한 견해와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시켰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가락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감보율은 종전 토지의 감정평가에 기준해서 체비지와 공공시설 용지에 제공되는 감보율을 산정한 것이며 그 감보율은 공공용지 34.56%, 체비지 22.82%로서 총 57.38%의 감보율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모두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체적으로 50% 이상의 감보율로 시행됐으며, 참고로 개포지역의 경우는 그 감보율이 68.34%에 달합니다.

구획정리사업의 감보율은 곧 주거환경의 쾌적성, 편리성, 지가 등과 관련되기 때문에 단순히 감보율이 크고 작은 것에 문제된다기 보다는 전적으로 그 시가지의 수준을, 도시환경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둘 것이냐에 따른 계획상의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감보율과 관련해서 사업이 완료된 지금 시점에서는 그 과다를 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되는 점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산금이 과다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락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경우 징수청산금은 382억원이고 교부청산금은 242억원으로서 순수 징수청산금은 140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역시 환지처분 시점에서 사업비의 균형을 맞춘다는 원칙에 따라 청산금이 결정된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都市計劃局長이 답변드렸습니다.

○副議長 李亮漢; 다음은 建設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張錫孝; 建設局長 張錫孝입니다.

白懿宗議員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임시회의에서 질의하신 재건축지구 내 사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단지 출입구로부터 200m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양도 가능한 종전규정을 삭제해 해서 지난 9월 21일부로 자치구에 시행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亮漢; 다음은 住宅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局長 梁甲;

金成奎議員님께서 송파구 거여2 자력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여2구역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여2구역은 자력재개발방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력재개발사업방식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환지방식을 준용한 것으로 도로 등 공공시설은 구청장이 설치하고, 환지에 정지에 개별적으로 건축을 한 후 환지 확정처분하여 사업을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시에서 자력재개발방식으로 시행하는 현황은 총 70개

구역으로 그 중 58개 구역이 완료가 됐고, 현재 시행중인 구역은 12개 구역인데 그 중 합동재개발방식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곳은 거여2구역을 포함해서 4개 구역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결정 당시 법적근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거여2구역의 사업계획 결정은 1976년도에 제정된 都市再開發法 제5조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고, 76년 9월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시행 인가가 되고, 84년 2월에서 85년 3월에 관리처분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환지받은 토지의 건축물을 개량하는데 421동 중 현재 109동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6·7평 토지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곳에 자력재개발사업으로 건축이 부진한 사유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가 6·7평으로 협소해서 건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공동환지로 했는데 적게는 2인에서 많게는 16인까지의 공동환지로 해서 건축이 가능토록, 예를 들면 그곳에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이런 것을 짓도록 했는데 아무래도 주민들의 경제력 부족, 또 주민간 합의가 잘 안 돼서 그 동안 좀 부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합동재개발방식으로 변경을 주민들이 해 달라고 했는데 변경되지 않는 이유와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합동재개발방식은 종전 토지를 권리면적으로 해서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형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그런 사업방식입니다.

따라서 자력재개발구역 중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일부지역을 합동재개발방식으로 바꾸려면 종전에 권리확정을 위해 이미 환지방식으로 관리처분된 내용을 폐지해서 종전의 권리상태로 환원하여 새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밟거나, 아니면 이미 사업계획 결정된 대로 사업을 종료해서 환지예정지의 권리를 종전의 권리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력재개발사업을 종료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 방법은 좀 무리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관리처분 내용의 폐지나 사업완료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현상태에서 사업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환지예정지의 종전 토지 인정과 사업종결을 위한 환지 확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建設交通部에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의 개정추이에 따라서 사업방식의 변경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만 松坡區廳長이 建設交通部長官에 질의해서 금년 9월 29일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이미 인가받은 사업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폐지하여야 사업방식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러한 회신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관리처분계획 폐지에 대한 주민합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할 松坡區廳長으로 하여금 주민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또 법 개정 추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개발사업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건물이 낡아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러한 재개발 사업 지원에 대한 건물 개·보수에 대해서는 재개발구역 내 행위완화지침에 의해서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사

항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亮漢; 다음은 地下鐵建設本部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崔昌植; 地下鐵建設本部長 崔昌植입니다.

朴謙洙議員님께서 지하철6호선 6-7공구 시공자인 신화건설 부도와 관련해서 지하철6호선 개통이 어느 정도 지연되는지, 보증업체 시공 또는 신규발주 등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이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6-7공구의 시공자인 신화건설주식회사가 지난 7월 31일자로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달 20일 동안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만 9월 19일부터 다시 공사가 재개돼서 활발히 가속도가 붙던 그런 과정에 다시 11월 1일자로 법원에 법정관리 폐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6-7공구에서 맡은 4개 정거장의 완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현재로서는 완료일자가 정확하게 언제가 될지는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완공이 지연되는 3호선과 환승역인 약수역을 포함해서 4개 정거장을 제외하고 남은 28개 정거장을 계획대로 개통하는 것을 검토할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 이용승객의 혼란, 4개 정거장의 승강장 안전문제, 또 4개 정거장 주변 주민들의 상대적인 피해의식 등 여러 가지를 종합 감안할 때 부분개통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화건설측과 계속 협의해서 4개 정거장의 완공시차를 짧게 할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기간 내 전 구간 동시개통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4개 정거장의 공사가 최악의 경우 장기간 지연될 경우에는 부분개통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남은 공사를 하는 방법은 현재 신화건설로 하여금 하게 하는 방법과 보증회사로 보증시공하는 방법, 또 재발주해서 새로운 업자를 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증시공을 하거나 재발주할 경우에는 최소한 착공을 준비하는 데 3 내지 6개월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화건설을 관리하고 있는 법정관리인하고 앞으로 일주일 후에는 파산관리인이 나오겠지만 지방법원의 관리인측과 협의해서 신화건설로 하여금 조속 공사 재개토록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李亮漢; 다음은 教育廳 教育政策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政策局長 李相甲; 教育政策局長 李相甲입니다.

趙養鎬議員님께서 학교가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운동장과 도서관, 컴퓨터실 등의 개발에 대하여 教育監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학교시설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도록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운동장을 개방하여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가선용 및 심신단련의 장으로 제공해 왔습니다만 일부학교에서 부득이한 학교사정으로 개방을 기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참고로 2000년 10월말 현재 운동장 개방현황을 말씀드리

면, 서울시내 1,164개 초·중·고등학교에서 거의 대부분 94% 이상이 개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개방에 소극적인 일부학교에 대하여는 점진적으로 개방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도서실 및 컴퓨터실 개방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학교도서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활용하는 문제는 현재 실정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학교도서실의 시설 및 장서 등을 확충 정비하고, 그리고 학부모들로부터 도우미, 또 지역주민들로부터 도우미를 선정한 다음에 평생교육 차원의 학교도서실 활용,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현황에 대하여는 2000년 8월말 현재 400여개 학교에서 컴퓨터실 등 40여개 영역에 걸쳐서 2만 5,000여명의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평생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활용을 더욱 확대하여 학교가 지역사회의 문화센터 역할을 함은 물론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심축으로 자리잡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副議長 李亮漢; 끝으로 教育支援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支援局長 李元根; 教育支援局長 李元根입니다.

金成奎議員님께서 教育監님께 학교급식 관련부분에 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서는 중·고등학교 급식의 감독소홀과 위탁 급식업

체의 운영미숙으로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비위생적인바 이에 대한 대책과, 두 번째, 초등학교 급식물품의 최저가 구입으로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보는데 학부모 주축의 급식품 검수 등 구매방법의 개선용의와 언론에 보도된 썩지 않는 우유의 급식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에 관하여 많은 관심과 충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2000년 11월 현재 우리 교육청은 초등의 경우 535개교 중 532개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353개교 중 185개교가, 고등학교의 경우는 279개교 중 263개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 3월부터 초·중·고 완전급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급식이 이와 같이 확대됨에 따라 급식의 안전성, 위생성과 함께 질 제고 문제가 더욱 중요해져 교육청에서는 식자재 구매 및 검수방법 개선을 현재 전면 재검토중에 있으며, 위생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2회 이상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품업체의 위생위탁업체 대표에 대한 교육과 영양사 및 조리 종사자 등 학교급식 관계자에 대한 내실 있는 연수와 함께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으며, 위탁급식운영학교의 경우 전담책임자를 지정하여 위탁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교실 등의 운영 시에 급식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적극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강화하며 가정통신문과 급식에 대한 설문 등을 통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는 등 학교구성원들이 다 함께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고 위생

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급식품 구매방법 개선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즉각 구매에 따른 학교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납품업체 선정시에 최저가에 의한 경쟁입찰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업체와 학교장이 계약토록 하되, 지속적으로 하지 말고 실적을 보아서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계약을 갱신하여 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업체간 비교분석, 영양사의 시장조사, 인접학교의 납품단가 등을 비교하여 계약함으로써 양질의 급식품이 적절한 가격으로 납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자재의 검수는 원칙적으로 납품 즉시 학교급식 전담직원 즉 영양사와 물품출납 담당공무원이 철저한 복수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만일 부적합한 식자재는 즉시 반품 또는 교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수결과 및 조치사항을 기록으로 기록하여 일지에 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식자재 검수방법 대안으로 제시하신 학부모를 주축으로 한 검수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일 검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부모를 식자재 검수 시에 참관토록 일선학교에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나 아침 일찍 참가해야 하는 등의 문제로 좀 소극적입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인 확대실시로 저질 식자재가 납품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7월 16일 한 초등학교의 썩지 않는 우유란 MBC 보도내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으며 왜 그러한 우유를 먹고 있는지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썩지 않는 우유보도와 관련 한 초등학교는 강동교육청관내 서울문덕초등학교이며 해당 우유업체는 매일 우유이며, 현재 98교 13만 5,435명이 같은 우유를 급식 받고 있습니다.

당시 문제된 우유에 대하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7월 18일 경실련으로부터 검사의뢰가 있어 2000년 7월 28일 검사한 결과, 방부제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없었다 하며 방부제 없이 해당 우유가 장기간 부패하지 않는 것은 부패에 필수적인 미생물이 없는 무균상태가 유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일반 포장우유의 장기간 상온보존시험 등을 앞으로도 계속 실시하여 우유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2000년 7월 21일 해당우유업체의 우유를 수거하여 서울特別市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규격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 전인 2000년 6월 8일에도 수거하여 서울特別市 보건환경연구원에 실시의뢰한 우리 교육청의 상반기 우유규격 검사에서도 해당 우유업체의 우유가 성분상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 공급되고 있는 우유제품의 위생상 유해여부 및 성분상의 적합여부 등 확인을 위해 연 2회 유업체별로 우유제품을 불시에 수거하여 서울特別市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있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는 유업체는 학교우유 급식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도 우유규격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우유가 공급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유급식 근거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구매 및 검수와 관련된 관계자의 관리상 책임문제가 아니라 우유의 질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으로써 학교장 등의 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어려우며, 향후 문제가 있다면 납품업체를 교체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급식의 위생개선과 질 향상 및 안전한 우유급식에 대한 사항은 각급 학교의 급식운영 지도점검 시 중점을 두어 확인토록 하겠으며, 대안으로 제시하신 급식품 구매와 검수에 관한 사항은 계속 연구 검토하여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 학교 급식의 질이 향상되고 안전하며 위생적인 급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으로 白懿宗議員님께서 마포구 아현1동 소재 서울소의초등학교는 많은 부지를 방치하고 운동장을 959평만 시설하게 된 사유와 울타리 바깥쪽 441평을 나대지 상태의 공지로 방치한 사유와 향후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려운 학교환경 및 여건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심을 우선 감사드립니다.

서울소의초등학교는 학교를 중심으로 삼면에 있는 인근 주택지와 고저 차가 10 내지 12m 정도로 지형상 경사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었던 부지로서 97년 12월부터 노후교사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당시는 21학급 규모의 소규모 학교였으나 아파트재개발 등을 고려하여 최종 40학급 규모로 수용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97년 당시 구 교사는 학교소유 총 부지면적 5,945평 중 경사지가 약 1,075평, 교사부지가 약 2,167평, 운동장이 약

1,926평,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가 약 564평, 인근 주민 점유 면적이 약 213평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주민 점유면적 213평은 점용료를 계속 부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축완료 후 현황은 총 부지면적 5,945평 동일한 면적이지만 경사지는 약 909평으로 줄어들었고 교사부지 약 2,347평, 운동장 약 960평, 주차장 약 146평, 화단 약 666평, 야외학습장 약 140평, 그리고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 약 564평, 인근주민 점유면적 약 213평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경사지 면적은 당초 약 1,075평에서 개축시 축대를 쌓음으로써 약 909평으로 줄어들게 되어 가용면적이 166평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운동장의 경우 당초 구교사의 운동장은 비정형적으로 교사부지 외의 남은 부지를 이용하게 되어 약 1,926평이었으나 개축시에 운동장을 반듯하게 정리하고 그 주변은 화단이라든지 야외학습장 등으로 꾸밈에 따라 정돈된 상태의 운동장 넓이는 약 960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울러 학급수의 대폭 증가와 제7차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실소요 확보 등을 위해 교사부지면적이 180평 증가되고 주차장면적 146평이 새로 확보되었습니다.

40학급 기준 운동장 면적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강당이 없을 경우에는 법상 1,390평이나 동 학교는 강당 겸 체육관이 229평, 수영장 229평, 총 458평의 체육장 시설이 있으므로 시설기준상으로 운동장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나대지로 지적하신 운동장 주변의 290평은 야외학습장으로 계획되었으나 예산 관계로 아직 완성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재개발 아파트부분의 울타리 바깥쪽 나대지 441평은 부지의 고저차로 인한 경사지 면적으로서 학교환경도 고려하여 당초 지형대로 경사지로 두되, 조경지로 계획되고 실행되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경지를 없애고 현재의 6 내지 8m인 축대높이를 10 내지 14m의 운동장높이까지 쌓는 방안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본청 차원에서 검토하여 그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께 즉시 보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학교주변 경사지 전체를 운동장 높이까지 축대를 쌓을 시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학교 및 주변의 미관과 안전문제, 재개발이 되고 있지 않는 인근주택 부분은 학교와 근접하여 높은 축대시설을 할 수 없는 형편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亮漢;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趙養鎬議員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養鎬 議員;

趙養鎬議員입니다.

高建 市長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 중에 저하고 강남·북간의 불균등 발전에 관해서는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원은 강남·북간의 불균등 발전이 전체 천만 서울시민의 단결을 해치고 또한 강남·북 간의 이질감을 조성해서 전체적

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에 호남차별로 인해서 영·호남 지역감정이 지금까지 우리의 암적 존재로 된 것처럼 강남·북간의 불균등한 발전을 해소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시급한 정책이라고 다시 한 번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하철정거장을 상징정거장, 환승정거장, 특급정거장, 일반정거장으로 구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구분하는 근거가 과연 어떠한 것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특급정거장에서 노원역 지하철역사하고 강남구청역 지하철역사가 상징정거장이라고 그랬는데 그 두 지하철역사의 공사단가, 그리고 그 두 지하철역사에 쓰여진 재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강남하고 강북 쪽의 병상수에 있어서 오히려 강북 쪽이 많다고 그러는데 시장님하고 저하고는 강남지역의 개념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강남은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송파구 정도이고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강남지역은 아마 한강다리를 기점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저하고 강남지역을 보는, 지역적으로 보는 견해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앞에서 시정질문을 할 때도 주장한 것이 뭐냐 하면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1,534병상수 또 강남구에는 2,925병상, 송파구에 2,938병상수가 있고, 그에 반해서 물론 강북 쪽에도 종로구나 중구에는 병원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중랑구는 1개 병원에 134병상, 강북구에는 294병상, 도봉구에는 474병상, 또 금천구에는 120병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북 지역간에 자치구별로 의료시설에 있어서 차이점, 차별성들이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 시 예산을 적극적으로 좀 투입해서 시립병원을 건립을 해서 강북 쪽 지역주민들의 의료시설의 개선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강북지역 병원수가 오히려 강남지역보다 많다고 하셨는데 혹시 개념 속에는 강남과 강북간의 인구수의 차이, 또 강북지역의 열악한 자치구의 병원, 의료시설, 병상수에 대해서는 혹시 개념이 안 나오신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는 다시 한 번 高建 市長님께서 강남·북간의 불균등 발전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으면 강남·북간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고 강북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강북지역에 대한 애착이 없고 하루빨리 돈만 벌면 강남구, 서초구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전혀 없습니다.

본의원도 만약 돈이 많고 생활여건이 개선이 된다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강남지역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북간의 불균등 발전 해소책 그것은 우리 서울시정에 있어서 그 어떠한 정책보다도 가장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저의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亮漢; 다음은 朴謙洙議員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謙洙 議員;

朴謙洙議員입니다. 市長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앞으로 향후 검토를 해 보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방송 공사화 문제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신중하게 처리해서, 느낌으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신 것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 중의 두 가지 큰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체수입비율이 경상비의 50%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34.7%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됐는데 34.7%는 광고방송이 아닌 협찬방송체제하에서는 50%가 앞으로 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구조적으로. 따라서 광고방송이 되게 되면 50%가 넘게 됩니다. 광고방송을 위해서 방송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찬방송하에서의 50%라는 조건을 그대로 고수하고는 공사화되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체가 바로 공사화 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상업방송 허가권이 방송위원회에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위원회에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채널로 들어온 바로는 방송위원회에서도 긍정적이다 이런 내용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하면 상당 부분 같이 공감을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1995년에 공보처에서 김영삼 대통령 시절때 방송법을

적용해서 부정적인 잣대를 잴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화에 대해서 안 된다 하는 잣대를 대고 있는데 본의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방송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방송이 공사화가 되면 지적인 대로 서울시민과 교통방송 청취자, 이 청취자는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인구가 다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방송 청취자, 그리고 우리 서울시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든 굉장히 바람직하다 하는 모두가 승리하는 윈윈사업 중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市長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좋은 내용이라고 판단돼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공사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亮漢; 다음은 金成奎議員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奎 議員; 高建 市長님하고 劉仁鍾 教育監님 답변은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비행청소년문제, 학교 중도탈락자 청소년들에 대한 향후 2001년 예산을 반영해서 완전한 그에 대한 대책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세부적인 실·국장님들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住宅局長께서 답변해 주신 거여2지구 재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장기간 그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관리처분계획을 폐지하고 종전 토지로 환원해

서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고, 또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잘 아시겠지만 관리처분계획을 폐지하게 되면 그 이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권리면적에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면적에 대한 축소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또한 더 작아지는 그분들의 땅을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폐지를 위한 절차를 밟으려 해도 굉장히 힘듭니다. 다시 한 번 주민들의 동의를 적정률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도 힘들고, 왜냐 하면 지금까지 10년 넘게 합동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오면서 수차에 걸쳐서 동의 받고, 또 받고, 재차 받고 이래 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현 상태로의 합동재개발사업을 변경하시는데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제를 해 주셨으면 건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教育廳 教育支援局長 답변에 대해서, 썩지 않는 우유 보도를 보시고 지금도 초등학교에서 98개교 약 18만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지금 현재 썩지 않는 우유를 먹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이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답변도 못 믿어서 또한 우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검사를 의뢰했다, 그러니까 인체에 해롭지 않고 성분상 적정하다, 그러니까 계속 먹인다 이것 아닙니까?

초등학생들이 매일 먹는 우유를 왜 하필이면 썩지 않는 우유를 먹입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고 그랬어요. 무슨 성분검사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 다 받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학부모들이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썩지 않는 우유, 6개월 이상 아주 상온시에 놔둬도, 저도 실험을 해 봤습니다.

제 차 뒤 유리 있는 데에다 저도 1개월 이상 가지고 다녔는데도 안 썩었어요. 그런 우유가 어떤 기술상에 문제가 있을지언정 그런 우유를 왜 먹입니까?

아침에 우리 가정에서도 매일 배달 받아서 우유 먹지 않습니까? 그런 우유를 그대로 매일 배달시켜서 먹이면 되는 것인데 하필이면 왜 썩지 않는 우유를 갖다 먹이느냐 이거예요.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죠? 그런 성분결과가 인체에 해롭지 않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학교장의 책임이 없어서 문책할 수도 없고, 향후 납품업체를 교체를 해 보겠다?

지금 학부모들이 그것을 교체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MBC방송에다 제보를, MBC방송국에서 아무 거나 보도를 해 줍니까?

그래서 MBC방송국에서 특종으로 보도해 주었어요, 교체를 해 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교체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교체 한번 해 보겠다? 지금 당장 교체를 하면 되잖아요. 왜 썩지 않는 우유를 먹이느냐 이거예요.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李容富 議長께서 서면질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20분 초과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했던 부분인데 우리 交通管理室長님, 제2 롯데월드 건립에 따른

잠실네거리 교통대책문제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실 때 서울시 교통대책특별자문위원회에서 4회에 걸쳐서 회의를 한 결과, 거기에서 지하철도는 기술상으로 절대 불가능하니까 고가차도로 해야겠다 이렇게 잠정결론이 났다 했는데 본의원이 자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문위원으로서 4회에 걸쳐서 한 번도 제가 빠짐 없이 다 참석해서 거기에서 회의를 하고 자문, 그런 것은 아니고 회의였습니다.

서로 의견교환.

그런데 주민대표라고 한 분 나오시고, 그 다음에 시의원 저 한 사람입니다. 그 외에는 副市長님 이하 관계국장님, 과장님들,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교수님들 해서 몇 분씩 나와 계세요.

그러면 시민을 대변해서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대표 한 사람하고 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저희들 주장은 먹히지를 않습니다.

제가 외국의 기술사례까지도 제기하면서 제 나름대로 조사하고 검토하고 했던 부분들을 주장하고 했지만 전혀 반영이 안됐어요.

그래서 지난 6월에 검토의견을 내라고 할 때 저는 반드시 기술적으로 충분하니까 지하철도로에 건설해 주십시오.

이것이 서울시민과 해당지역주민의 의견이고 의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의 뜻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고가차도로의 건설은 절대 반대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 답변은 4회에 걸쳐서 특별자문위원회에서 결론 났다, 어떻게 검토해서 결론 났는지 저는 그런 결론

에 대한 보고를 한번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11월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결론 맺어서 공청회 하면 뭐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마지막 6월에 자문단회의 했던 회의내용, 저는 반드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참석위원이 몇 분이었으며 몇 분이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하차도는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냈고 어떤 위원들 몇 분은 지하차도를 찬성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副議長 李亮漢; 이상 세 분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두 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과 신상발언을 들은 다음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宋台京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台京 議員; 본의원은 요즘 위대한 2인자들이라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끊임없는 정보교환과 상호의존 없이는 아무리 재능 있는 사람이라도 혼자 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난 날 리더에게 요구되던 카리스마적인 권위는 이제 점점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협력과 협조의 미덕이 갈수록 더 강조되고 있다. 새로운 조직세계에서 권력은 한 사람에게 있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치가든 실업가든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분산해 공동스타, 공동의 가치와 포부를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해 나갈 협력자들을 만들어야 한다.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파트너와는 할 수 있다. 협력자들은 리더십을

그들의 재능을 묶는 협력자정신이라고 재정의하고 있다. 협력자정신은 모든 사람을 성자로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高建 市長을 일컬어 행정의 달인 즉 행정의 일인자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달인이라는 말에 도취되어 시대에 뒤떨어지는 독선, 독주하는 행정은 없는지 협력자들의 말문을 막는 행정기관이 되고 있지는 않나 냉정히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살아생전에 세상을 거머쥔 그였지만 죽을 때는 빈손임을 보여주라는 뜻으로 나의 관에 구멍을 뚫어 두 손을 보여주라는 유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한국 최초의 안과의사이자 한글타자기 발명자인 공병우 박사는 나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지 말고 쓸 만한 자기 시신은 모두 병원에 기증하라.

죽어 땅 한 평을 차지하느니 그 자리에 콩을 심는 것이 낫다라는 말을 남겨 그의 죽음은 이틀이 지나서야 세상에 알려졌더라는 것입니다.

서울시 행정이 구멍가게 운영 정도라면 공과사의 구분이 필요 없겠지만 인구비중으로 세계 5대 도시에 속할 정도로 비대합니다.

高建 市長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퇴임 후 고시장에 대한 평가가 특혜받은, 재임시 특혜받은 몇 사람에게 의한 사람 좋았다라는 말보다는 高建 市長을 한 번도 대면하지 않은 수많은 시민들이 高建 일 잘했어, 팬찮은 사람이었어로 기억되는 것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칙과 공평무사, 정의를 선택하는 것이 순간에는 인간관계의 단절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크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高建

市長을 사랑하는 기억이 이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 고위공직자가 여성문제로 나쁜 소문이 들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의 사적관계자들에 대한 편애인사로 말미암아 불만들로 인해 시장의 영이 제대로 안 선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을 바로 세워 행정을 펴시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시장께서는 고질 집단민원 등을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를 통해 시장에 핑계를 대기도 하여, 관계 실무공무원이 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에서 융통성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뜻도 있다라고 하는 사석의 말씀을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의회 의원들의 건전한 대안과 조언은 수용하지 않고 함께 하지 못하는지 본의원은 매우 유감입니다.

셋째, 요즘 여름과 겨울은 있는데도 봄과 가을은 느낄 수 없다. 봄의 향기가 느껴지기 전에 후덥지근한 여름이 느껴지는가 하면 긴 무더위의 여름이 지나고 단풍이 무르익은 가을을 느끼는 시간이 너무 짧다.

이러한 느낌은 서울이 더욱 심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어느 기상전문가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걱정하였습니다. 남아 있는 작은 산과 녹색공간이 없어지는 것을 크게 지적하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최적의 환경생태도시가 되도록 여러 분의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국적 컨설팅회사인 윌리엄 머서사가 세계 216개 도시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조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92번

째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는 도시 안전성, 범죄 발생률, 은행 서비스 수준, 의료 서비스, 수질오염도, 교통혼잡도, 여가시설, 생필품, 주거환경, 기후 등 모두 39개 항목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웃 나라 동경은 2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의지가 시장에는 있었습니까, 시끄럽고 귀찮고 민원이 발생하는 일은 아예 처리하지 않습니다.

실례로 참을성 많고 타인들에게 싫다는 내색을 잘 안 하는 우리 서울의 착한 시민들의 의식을 볼모로 도시의 미관과 시민의 안전을 해치는 노점상이나 불법 시설물들에 대한 처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색내거나 품 잡는 일에는 몇십억 몇백억씩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다. 시장의 뚜렷한 방향있는 정책의 철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운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폐막경기가 요코하마로 결정되었지만 폐막경기장으로 거론되었던 사이타마 월드컵축구경기장을 시찰할 기회가 있어서 관계자에게 지붕막 관련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산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품질에서 제일 나쁘고, 국민정서도 고려하여 상암경기장의 지붕막 선택에 있어 문제점을 본의원이 여러 번 지적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문제가 제일 많았던 일본 제품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국제행사를 치러야 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시장에서 월드컵문제만은 직접 철저히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IMF를 거치면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새로운 소외계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도와주지 않아도 정 안 되면 약자들까지 탈취해서라도 스스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소녀소년 가장, 노숙자 등에 대한 각종 법인 및 단체들의 횡포를 잘 살펴 작은 예산에 기대어 생명을 연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지키고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살펴주셔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눈보다는 마음의 눈을 통해 소외받고 힘없는 시민들을 돌보면서 퇴임하시는 모습을 본의원은 그려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장께서 늘 주장하시는 수레의 양바퀴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관계가 유지되기를 희망하며 향후는 그렇게 될 것임을 믿으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맛있는 케이크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시장과 본의원이 한쪽씩 먹으려고 할 때 그 방법은 시장께서 먼저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은 본의원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지혜로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의 각별한 노력을 요망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亮漢; 다음은 신상발언 신청하신 金恩京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恩京 議員; 金恩京입니다.

시장님의 서면답변 형식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서면답변은 시장께서 즉시 답변을 하시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시간을 가지고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시장의 답변 중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기로 한 부분은 역시 서면이라 하더라도 시장의 이름으로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장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했던 부분들의 답변서는 모두 해당 부서의 과장 이름으로 제게 전달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시장께서 검토하신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서류에 결재자의 이름이 없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제가 시장께 시정질의 때 답변을 요구드린 부분은 반드시 시장 서명이 있는 답변서로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무리한 요구이거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기서 지적을 해야 되는지 자체가 사실은 의아스럽습니다.

아주 누구나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당연한 일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가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 전문위원실이나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문제가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시장님의 서명이 들어있는 답변서를 받을

수 있도록 형식을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亮漢; 방금 白懿宗議員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白懿宗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懿宗 議員;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실은 보충질의를 생략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안이 본의원이 느낄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해서 한 두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에서 간절히 당부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답변을 그야말로 절실하게 잘해 달라는 당부를 하기 위해서 간절히라는 단어를 여러 번 강조했고 그 간절히라는 뜻까지 제가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유지에 관해서 지난 121회 임시회 때도 관계국장께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보충질의 때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9월 21일 본의원의 질의에 따라서 관계부서에서는 마포자치구에 서면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 자치구에서는 뭐라고 하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도, 말하자면 관계공무원 본인도 잘못적용을 재건축 조합에 했다고 하는 것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본의원이 제시한 대로, 지적인 대로 무

상양도했을 경우에 그 동안에 시유지를 팔아먹은 금액에 대해서 다른 지구에서도 다시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할 때는 참으로 마포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서 참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 그러면 언제까지 불법을 자행하면서 그 많은 것들을 끌고갈 것이냐 했더니 가능하면 시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해서 무상양도하라고 하는 서면지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까지 해서 오늘 본의원이 다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공무원이 법을 알려주었는데도 그토록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그 공무원이 우리 서울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췄으며 또 더 이상 존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심각한 생각까지도 갑니다만 본의원은 그 공무원한테 신상에까지 누를 끼치는 것은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다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교육감님 자리에 안 계시는데요, 소의초등학교 운동장 석축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 옆에 삼성이 재개발하는 그 아파트가 골조를 올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인근 아파트 입 주 주민들이 이제는 조망권이나 일조권 등을 핑계삼아서 교육감의 소유부지에 석축을 쌓지 못하게 할 상황에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가서는 내 땅이면서도, 말하자면 교육감 땅이면서도 그 부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오늘 본의원이 강력하게 긴급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로서 일관한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부족하다.

검토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쓰고 옳기도 한데 그 검토가 두 달, 세 달, 일 년 가도 그 검토가 끝나지 않고 오리무중에 떠 있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고 하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조치해 주시고 또 오늘 시유지 관련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마포 자치구의 관계공무원한테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亮漢; 방금 李敬愛議員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李敬愛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愛 議員; 시장님께 급한 상황으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부도회사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에 관련되어서 부채를 안고 있는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성수대교로 인해서 동아건설이 현재 145억에 플러스 이자까지 서울시에 물고 있어야 됴에도 불구하고 이회사가 아직 머문 상태에 있고 현대건설 7공구에, 월릉교 구간에 384억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세금을 아직도 해결하지 않는 가운데 있는 현대건설이 지금 부도다 또는 부도 일보 직전에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항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이 이 부도나는 회사들과 또는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누수되지 않게끔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본의원이 조사한 외에도 서울시와 관련하여서 시장경제의 어려움상 부도가능한 범위에 있는 그런 회사들이 부도가 났을 때 서울시민의 세금이 누수되지 않게끔 하는 부분에 시장님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장님께서 노인들을 위해서 여러 모로 배려하셔서, 나름대로 제가 동네를 다녀보면 시장님께서 노인복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표하는 어른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 생산성 있는 노인들의 공간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생산성 있는 노인들의 공간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에 적극적인 반영을 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경제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순세계잉여금 2,500억원을 부채상환으로 내년에 예산을 세우시고 경제난항으로 인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탈락한 한시보호자들에게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李亮漢; 방금 보충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高建 市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高建;

먼저 趙養鎬議員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趙議員님께서서는 강남·북간의 불균형문제와 관련해서 지하철역의 정거장을 여러 등급으로 구분했는데 그 구분기준과 이에 따른 예산단가에 대해서 소상한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소상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강남·북의 병상수 비교에 있어서 제가 강북의 병상수가 강남의 병상수보다 조금 많다는 답변을 드린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서는 강남·북의 지역개념 구분 자체가 문제다.

특히 강북지역 중에서도 중랑지역을 비롯한 동북지역의 의료취약지역에 있어서는 의료시설의 부족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앞으로 시의 의료정책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지역에 노인종합병원을 신축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좌우간 앞으로 의료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이 점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남·북 균형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강남·북간의 불균형 해소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신 뜻으로 제가 알고 시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강북에서 출생하고 강북에서 초등학교 다니고, 중등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북에 살고 있어서 저도 남달리 강북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강북에 대한 애정이고 공인으로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북간의 균형적인 발전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절실한 과제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앞으로 시정책에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쏟아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朴謙洙議員님께서서는 교통방송의 공사화문제와 관련하여 말씀이 계셨는데 결국은 교통방송의 공사화 여부는 상업광고의 허용여부하고 가능여부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90년도에 교통방송을 개국할 당시에 이 문제를 다루어 봤기 때문에 압니다만 사실은 법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매스컴 내부의 광고료 분담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이것이 단순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 나가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朴議員님의 협조도 얻어서 이렇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교통방송이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앞으로 추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白懿宗議員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白懿宗議員님께서 말씀하신 재건축지구 내의 공공시설, 말하자면 시유도로라든지 공공시설의 무상양도에 대해서는 建設局長이 답변드린 대로 2000년 9월 20일부로 허용이 가능한 것으로 허용하는 그러한 지침을 각 자치구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마포구에서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다 하는 지적말씀이 계셨는데 결국 이것은 소급적용에 관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 지침에 대한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서 실무 국·과에서 이것을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세 분 의원님께서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저에게 참고되는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宋台京議員님께서 월드컵경

기장의 지붕막 재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에 문제가 이것을 일제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을 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시공사의 사장을 불러서 발주처의 책임자로서 요구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의 생명은 지붕막의 재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서울시로서는 턴키베이스로 해서 입찰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설계기준에 나와 있는 자재기준보다도 더 우수한 세계 최고품질의 지붕막으로 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아니고요. 세계에서 제일 최고의 품질이고 최고 가격인 캠페브사의 제품으로 저는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金恩京議員님 서면답변 형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서면답변의 형식이 시장의 관인이 찍혀나가기 때문에 시장의 책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작성책임자와 연락관계가 찍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金恩京議員 직인 있는 답변서를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직인 찍는 것을 봤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위의 표지가 없이 밑의 자료만 갔습니까?

(의석에서 ○金恩京議員 네.)

그러면 그것은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인은 안 하고 시장의 직인이 찍혀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국회 답변도 서면답변은 똑같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미리 갖다 드린다든지 하면서 시행공문은 없고 유첨 자료만 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점 저희가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李敬愛議員님께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각별히 말씀하신 것 유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亮漢; 다음은 交通管理室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交通管理室長 車東得입니다.

金成奎議員님께서 아까 제가 답변드린 잠실네거리 입체화 방법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대로 잠실네거리의 입체화방법 문제는 원래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이 붙어서 나갈 때는 고가차도로 결정돼서 나갔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송파구청에서 건설허가시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하차도를 중심으로 검토하도록 조건이 부여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98년 국정감사에서도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었고 우리 시로서는 기술적인 사안을 더 철저히 점검해야 될 필요성을,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민원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지난 1년에 걸쳐서 도로나 교통이나 지하매설물이나 이런 제반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고가차도안에 대해서도 두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지하차도 방안에 대해서도 세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던 것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전문가와 또 시민단체들이

포함된 특별자문단, 모르시는 의원님을 위해서 잠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교통전문가로 대학교수 두 분과 도로전문가 한 분, 설계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종 구조물 설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구조기술자 두 사람, 환경문제가 중요하니까 환경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연구원 원장이 특별자문단이고, 그리고 도시계획 분야의 교수가 참여하고, 또 이것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한 분 참여했고, 또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시의원 두 분이 여기 자문단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대표가 한 분, 그리고 당초 언론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대표, 그리고 우리 내부위원은 교통관리실장과 건설국장, 주택국장이 당연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특별자문단에서 그 동안 실무진에서 검토된 상세한 검토결과 5개 안에 대한 것을 특별자문단에 보고하고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난 6월에는 16명 전체가 다 참석을 못했고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의원님 물으신 대로. 그래서 그 중에 9명이 구체적인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가차도를 선호하는 의견을 낸 분이 6명이고, 지하차도를 해야 된다고 했던 분이 2명이고,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했던 분이 한 분입니다.

물론 金成奎議員님은 시민들의 민원을 대표해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반대를 하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하시설물의 훼손이 심하고, 또 건설 후에도 운영상 실익이 없다는 이런 기술적인 판단이 강한 문제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주민투표 형태로 과반수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 대로 1년에 걸쳐서 충분한 상세한 기술적인 환경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별자문단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논의를 하고 한 것이 4회에 걸쳐서 있었다는 뜻이고, 6월에 의견을 서로 개진했을 때, 물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도 이것은 기술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니까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고 결론을 그렇게 모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실무진에서는 11월 초에 이 지역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또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그 불가피성을 다시 설명 드린 후에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亮漢; 다음은 住宅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局長 梁甲; 住宅局長 梁甲입니다.

위원님께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거여2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처분내용을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을 때 관리처분내용을 폐지해서 종전의 권리상태로 환원해서 하는 방법, 또 아니면 이미 결정된 대로 사업을 종료해서 환지권리를 종전권리로 인정하는 두 가지를 했는데, 사실 다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간의 서로 권리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관리처분상의 폐지나 사업완료 절차를 거치지 않는 현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원님께

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建設交通部와 적극적으로 더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으로 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민들이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를 또 신청하셔서 이번 토요일에 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더 심도 있게 다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亮漢; 끝으로 教育廳 教育支援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支援局長 李元根;

金成奎議員님께서 썩지 않는 우유를 먹이는 이유와 급식업체를 교체해 달라는데 왜 교체 않는가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학교급식업체 선정은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으니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통 어떤 경우에는 복수로 추천합니다만 그렇게 하면 학교장이 결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 특정우유가 문제가 있든 없든 학교운영위원회가 원한다면 급식업체를 계약이 만료된다든지 하는 등 적절한 사유가 있을 때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동 우유가 과학적으로 부적합하다든지 유해하다 등의 객관적인 검증이 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저희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교체지시를 한다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로서 학교장이라든지 학교운영위원장 등 학교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고려해 보고 대체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석에서 ○金成奎議員 운영위원장하고 운영위원들이 그것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를 했어요. 문제제기를 하고 교체를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운영위에서 납품 업체를 선정을 합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체해 달라고 지금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납품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학교장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 학교는 그것이 아니고 학교장이 임의대로 썩지 않는 우유를 납품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장과 학교운영위원들이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에 성분의 인체 유·무해를 의뢰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 답변이 전혀 맞지 않고, 학교장을 문책해야 되고 그 우유를 교체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시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다시 저희들이 학교장이라든지 운영위원장 등의 의견을 들어서 어떠한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왜 그러한 문제가 있는지 다시 고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白懿宗議員님께서 석축문제를 다시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부교육청 소관입니다만 교육청에 맡기지 않고 저희 본청에서 직접 조사하여 그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려면 관계 마포구청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저희들 소관이 아닌데 본청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세부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亮漢; 방금 金成奎議員의 이의제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구체적으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議員님과 답변해 주신 執行部 公務員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同僚議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6時 16分 散會)

○出席議員 93人

姜榮元	李順子	李宗弼
羅鍾文	宋美花	鄭東一
金奇德	金泰潤	金東郁
金聖泰	金明洙	鄭鉉均
金星煥	趙養鎬	金恩京
李敬愛	鄭圭鎭	明英鎬
朴柱雄	吉基演	趙泰鎭
韓春子	林浩植	朴來雨
金成浩	金成奎	李東秦
金俊明	任東淳	河海鎭
朱世晚	金鍾來	徐興善
金魯珍	任元彬	柳辰永
金判吉	金寬洙	崔明玉
宋台京	李健相	李政恩
李海植	韓鳳洙	李松竹
金光洙	尹汝亨	金在實
金興植	李康珍	車星煥

朴正哲	金善會	具哲會
呂鼎九	朴謙洙	金洛淳
咸泰浩	金平城	洪承采
盧永奭	張夏雲	申炯植
李成浩	車元甲	趙成大
黃乙秀	金鎬一	李喆鎬
金周喆	梁敬淑	金永俊
金玉源	劉俊相	鄭韓植
黃好淳	이금라	金喜甲
朴洙桓	鄭泰宗	鄭在天
吳世根	崔鍾德	李禮子
金種求	李載震	劉大運
崔鍾午	李容富	閔鍊植
白懿宗	李聲九	李亮漢

○出席公務員

서울特別市

市長	高建	
交通管理室長		車東得
保健福祉局長		鄭圭台
都市計劃局長		邊榮進
建設局長	張錫孝	
住宅局長	梁甲	
地下鐵建設本部長		崔昌植

서울特別市教育廳

教育監	劉仁鍾
-----	-----

教育政策局長 李相甲
教育支援局長 李元根

(서면질문서)
(서면답변서)